

도서관의 이데올로기화 과정에 관한 연구

- 구동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deology of Libraries - East Germany -

노 문 자(Moon-ja Ro)*

〈목 차〉

1. 서론
2. 나치시대의 도서관
3. 2차 대전 후 동독도서관의 상황
4. 브르주아 사서에서 사회주의 사서로의 전환
 - 4.1 사서의 탈나치화와 사서인력의 변혁
 - 4.2 사서의 정당성(政黨性) 대 객관성 학술도서관, 사서의 직업관
 - 4.3 사서의 전문직 교육과 사회주의적 교육
 - 4.4 사서의 전문성과 정치적 갈등
5. 학술도서관의 장서
 - 5.1 파시스트적 문헌과 호전(好戰)적 문헌의 정화작업
 - 5.2 국가경제발전 중심의 장서개발: 자연과학과 기술분야
 - 5.3 도서관 장서구성과 정당과의 상관 관계
6. 이데올로기 선전도구로서의 학술도서관
 - 6.1 학술도서관의 개방
 - 6.2 정당 홍보도구로서의 진보적 도서관
 - 6.3 불온도서의 관리
7. 결론

초 록

세계2차 대전 후 서독과 동독은 분단이 되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국가 체제로 41년 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됐다. 동독은 냉전시대에 소련의 영향권에서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건설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학술도서관 역시 새로운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변모를 해야만 했다. 변화된 국가적 환경에서 도서관 역시 이 변화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학술도서관은 국가 체제유지의 도구로 이용됐다.

주제어 : 동독, 도서관의 이데올로기화.

Abstract

After division of Germany, East Germany was established as a socialistic nation. The new socialistic nation needed new systems in many different areas such as political, social, educational and cultural. In the new political system based on socialistic ideology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political parties used the academic libraries as a political instrument. Thus the members of the political parties exercised socialistic ideology on the management of the libraries. For example, in the appointment of the library directors, in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librarians, in the collecting development policy, in managing the seditious materials etc the influence of socialism can be seen.

Key Words : East Germany, Ideology of libraries

* 송의여자대학 문헌정보과 교수(lomj@sewc.ac.kr)

· 접수일 : 2002. 2. 19 · 최종심사일 : 2002. 3. 12 · 최종심사일 : 2002. 3. 21

1. 서론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와 같은 분단국가에서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의 41년 간의 분단상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분야에서 이질감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던져주었다. 통일 이 된지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통일의 후유증은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다. 도서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통일 직후 도서관계에서는 동·서독의 도서관계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려면 적어도 15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예측했었다.

본 논문은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소련과 서방 연합군이 독일을 잠정적으로 통치하면서부터 동·서독으로 분단된 후 60년대까지 동독 학술도서관이 어떻게 체제전환기를 거쳐 사회주의국가의 도서관으로 정착되었는지 그 변해 가는 과정을 다루었다. 도서관은 국가의 체제 전환기와 정착기에서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었다. 이는 바로 도서관 업무 전반에 걸쳐 국가와 당의 입김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사서의 교육, 도서관장의 임명, 도서관 직원들의 정치교육과 훈련, 불온도서 관리, 도서관장서 개발 정책 등 도서관 업무 전반에 걸친 국가와 당의 영향력을 통해 동독 도서관이 동독 국가이념체제로 변화하는 과정을 고찰했다. 이러한 과정의 추적은 20세기 도서관 역사에서 도서관을 이데올로기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예를 제시함으로써 21세기 통일을 앞둔 우리 미래의 도서관정책에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1994년 김일성의 죽음이 곧 바로 통일과 직결된 것처럼 온 국민이 통일의 열기에 휩싸였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급진전되던 남북관계가 최근 들어 소강상태에 빠져있다. 언제나 통일이라는 과제를 안고 사는 이 시대에 국가의 모든 기록이 일원적 집중관리체제로 운영되고있는 동독도서관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의 도서관계를 이해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라 믿어 분단 후의 문헌과 통일 후의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2. 나치시대의 도서관¹⁾

동독은 반파시즘과 반히틀러 혁명을 통해 건국이 되었기 때문에 동독의 도서관 상황을 서술하기 전에 나치시대의 도서관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필요하다. 나치시대의 도서관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사서들이 도서관에서 해직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유대인이나 유대인과 결

1) Ch. Quasten, "Bibliotheken während des Nationalsozialismus", *Zeitschrift fuer Bibliothekswesen und Bibliographie(ZBB)*, Jg 36, H 2(1989), p. 165-172.

혼한 사서들은 1933년 사서직 공무원제도가 다시 도입되면서 도서관을 떠나야 하는 사례가 생겼다. 영화 ‘쥔더 리스트’에서처럼 도서관 직원의 도움으로 사서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내부자의 고발로 인한 피해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어렵게 근무하던 유대인 사서들은 1935년 ‘뉴렌베르크 인종법’의 공포 후 더 이상 설자리가 없게 되었다.

민족사회주의노동당(NSDAP) 소위 나치당과 사서직 공무원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서의 정치성, 즉 사서의 나치당적의 여부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사서직 유지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사서의 정치적 성향보다는 전문성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그러나 고급주제전문사서의 경우에는 1938년부터 나치당적은 필수 사항이었다.

자료의 선정에 있어서 민족사회주의 사상의 출판물은 당연히 우선되었다. 그러나 학술도서관에서는 정치적으로 정당이념에 위배되는 내용의 출판물도 힘든 토론의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구입은 가능했다. 이렇게 어렵게 입수한 장서는 다른 도서들과 분리하여 특별목록에 정리하였고, 서고에서도 별도로 비밀스럽게 관리하였지만 자료를 폐기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자료의 이용은 정치적 신임을 전제로 한 특별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했다.

Jena대학도서관은 그들 장서의 30% 이상이 나치국가이념에 위배된 도서로 폐기처분되어야 할 형편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이 도서관에서는 그들 장서의 폐기를 모면하기 위해 장서의 내용점검을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거나 대충 넘어가기도 했다. 이와 비슷한 예로서 Halle 대학도서관과 Wolfenbuettel 도서관은 유대인 문학작품의 폐기를 피해가기 위해 이 장서를 중요하지 않은 장서로 분류, 위장하기도 했다.

전쟁의 지속은 도서관의 재정을 빠른 속도로 악화시켰다. 그 결과 외환의 부족으로 외국자료의 구입에 심한 타격을 받았다. 외국자료의 부족은 사서들이 직접 여행을 통해서 보충했다. 그러나 기술분야와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학술도서관은 전쟁이 끝나기 몇 달 전까지도 중요한 외국학술지를 구독하였다. 1943년 폭격전쟁이 학문과 연구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서부터는 도서관마다 장서의 대피책에 들어갔다.

2차 세계대전 때 도서관은 행정관리 면에서 교육학문성 관할 하에 있었으나 당시 국립도서관의 기능을 맡고 있었던 라이프치히(Leipzig)의 독일도서관은 예외로 나치당의 선전부에 속해 있었다. 나치당의 선전부장이었던 Goebels는 나치 이념에 위배되는 출판물의 수집과 이러한 자료를 국가서지에 수록하는데는 개입하지 않았으나 1936년부터 국가서지의 기술은 별도로 관리했다.

나치정권에 편승하여 나치이념에 관련된 주제의 출판물을 전시함으로서 역사적으로 명예롭지 못한 예는 Herzog-August도서관이었다. 이 도서관은 히틀러의 그 유명한 “Mein Kampf (나의 투쟁)”를 상설 전시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서관은 그들의 업무를 나치시대에도 과거 평상시처럼 처리해왔다. 학술도서관은 민족사회주의의 선구자도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특별히 적대적이지도 않았다. 도서관은 전쟁으로 변화된 상황에서 그 당시 독일국민의 행동 양식을 반영하는 그 자체의 영상일 뿐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3. 2차대전 후 동독도서관의 상황

1945년 5월 2차 세계대전이 공식적으로 종말을 고할 때 독일에서는 수많은 대규모 학술도서관이 이미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었다. 도서관 건물들은 파손되거나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목록 또한 피해를 입었고, 장서의 손실 역시 막대했다. 장서의 보관 조건이 최악인 경우에는 장서 자체가 위협을 받을 정도였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Georg Leyh는 1947년 “독일 학술도서관은 유럽 문화의 생존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전쟁으로 인해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사태는 도서관 역사나 학문의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재앙이다”²⁾ 고 전쟁 후의 상황을 서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지역, 도서관과 도서관의 피해상황에 큰 차이가 있었다. Jena대학도서관은 완전히 중앙 건물이 파괴되었고, 베를린국립대학도서관과 라이프치히대학도서관은 심하게 파손되어 극히 제한적으로만 도서관 이용이 가능했다. Rostock 대학도서관은 비교적 피해가 적었고, Greifswald와 Halle 대학도서관의 건물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³⁾.

대부분의 도서관은 전쟁동안 그들의 장서를 자체의 서고보다 안전성이 보장된 다른 장소로 옮겼으며 장서를 250m 폭과 350m 깊이의 땅굴에 옮기는 과정은 모험담 같았다. 그러나 당시 독일의 수도였던 베를린의 대표적 도서관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료의 서비스를 위해 그들의 장서를 옮기지 못했다⁴⁾.

도서관들은 그들 장서의 손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타지역에 옮겨졌던 장서들을 소속 도서관으로 옮겨야 했다. 이러한 업무를 위해서는 인력이 턱없이 모자랐지만 이보다 더 심한 것은 운송수단의 부족이었다. 예를 들면 Halle 대학도서관의 장서 440 상자⁵⁾와 라이프치히대학도서관의 장서 42,000 권⁶⁾은 안전하게 옮겨진 곳에서 전쟁의 희생이 되고 말았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일부 장서가 도둑들에 의해 사라져버린 경우도 있었다. 라이프치히 독일도서관의 장서 50,000 권은 지하실에서 화염에 휩싸였으나⁷⁾ 베를린국가도서관의 상황은 예외였다.

2) Georg Leyh, "Der Bibliothekar des Zukunft", *Zentralblatt fuer Bibliothekswesen(ZfB)*, Jg. 63(1949), p. 158

3) G. Leyh, *Die Deutschen Wissenschaftlichen Bibliotheken nach dem Krieg* Tuebingen. 1947. p. 40ff.

4) J. Krueger, J. und W. Imscher. *Zur Geschichte der Berliner Universitaetsbibliothek*. Berlin : 1981. p. 28.

5) B. Scheschonk, "Die Universitaets- und Landesbibliothek Sachsen-Anhalt in den Jahren 1948-1955 und ihre Altbestaende", *Studien zum Buch- und Bibliothekswesen*. 3(1983), p. 38.

6) E. Vesper, "Zehnjahresbericht ueber die Arbeit der Universitaetsbibliothek Leipzig(1945-1955)", *ZfB*. Jg. 70(1956), p. 443.

7) F. Schaaf, "Zur Geschichte der Deutschen Buecherei nach 1945", *Deutsche Buecherei*. Festschrift zum fuenfzigjaehrigen Bestehen der deutschen Nationalbibliothek. Leipzig 1962, p. 67.

베를린국가도서관의 장서는 과거 독일제국 지역에 30군데로 분산시켜 보관됐다. 그러나 전쟁 후 소련점령지역(SBZ)이외에 보관됐던 50% 이상 약 1,800,000 권은 동독으로 돌아오지 못했다⁸⁾. 이 장서는 점령지역(서독) Marburg와 Tuebingen을 거쳐 서베를린의 국립프러시아문화 재도서관 소유로 되었다가 통일 후에는 수도 베를린의 국립도서관의 장서가 됐다.

전쟁 후 도서관 재건사업의 과제는 파괴된 건물의 재건축과 장서의 반송, 정리였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그리하여 베를린대학도서관 관장 Wieland Schmidt는 도서관의 원상회복에는 건물, 장서, 전문인력 이 세 요소가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⁹⁾.

4. 브르주아 사서에서 사회주의 사서로의 전환

4.1 사서의 탈나치화와 사서인력의 변혁

도서관의 재건에 필요한 도서관 전문인력의 부족은 전쟁과 새 국가의 건설로 인한 여러 가지 요인에서 야기되었다. 첫 번째 사서는 군인들이나 민간인으로 전쟁의 희생이 되어버렸다. 특히 Jena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하던 12명의 사서는 도서관장 Theodor Lockmann까지 모두 포함하여 1945년 도서관 근무처에서 폭격의 대상이 되어버렸다¹⁰⁾. 두 번째로는 사서들이 전쟁포로가 되었다. 세 번째는 사서들은 그들 고향이 폭격을 당해 귀향 할 의미가 없어져 버려 타도시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 네 번째는 부상을 당하거나 병을 얻어 도서관 근무가 불가능했다. 다섯 번째는 연합군 승리세력에 의한 도서관의 탈나치화 과정에서 사서들은 그들의 사상적 동기로 인해 도서관에서 해고되었다.

전쟁 후 동독에서는 공공행정부문에서 과거 민족사회주의의 세력인 나치시대의 잔재를 제거하는 정화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공공행정분야에서 근무했던 직원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인 성향을 조사하여 세밀한 기준에 따라 인력을 정화해나갔다. 이러한 조치는 사서에게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특히 연합군의 시각에서 볼 때 국민교육과 개혁의 과정에서 새 국가 건설에 중요한 사회의 안정과 정치적 기초를 다지는 조정요소로서 사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

8) H. Kunze, "Die Deutsche Staatsbibliothek", *ZfB Jg* 69(1955), p. 10.

9) Krueger, *op. cit.* p. 30.

10) Victor Burr, "Aus dem ersten Jahr nach der Zerstörung der Universitätsbibliothek Jena(1945/46)", *Weite Welt und breites Leben. ZfB : Beiheft* ; 82. Leipzig. 1966. p. 65.

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적 성향의 조사는 여러 단계로 진행됐다.

대학의 숙청작업은 먼저 대학 행정부 자체에 위임했다. 이 과정에서 나치시대 대학 교직원에 대한 정치활동영역이 조사 평가의 대상이 되었다. 조사의 대상은 주로 교수들이었고 사서들은 그들에 비해 가혹하지 않았다. 도서관 직원의 숙청은 나치조직의 회원이었다는 증명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교수진이 대학에서 계속 머물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대학에서 특정 교수를 그의 반이념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고도 해고시키지 못했으나 사서들한테 이러한 예는 적용되지 못했다¹¹⁾. 탈나치화 작업의 대상에 해당된 도서관 직원은 구체적으로 그 숫자가 밝혀졌다. 라이프치히 대학도서관에서는 전쟁 후 57명의 직원 중에서 22명이 나치당원이었거나 또는 그와 유사한 조직의 회원이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국립도서관인 독일도서관에서는 160명의 직원 중에서 65명이 해고되었고 그 외 동독의 대규모 주립도서관과 작센 학술도서관에서는 직원의 40%가 해고자 명단에 포함됐었다¹²⁾.

도서관 직원들에 대한 정치적 정화작업의 결과는 도서관 업무에 심각한 사태를 초래했다. 나치이념에 동조했던 교수진은 전쟁 후 대학의 온전한 기능을 위해 과거 나치당적에서 명예 회복이 되어 다시 대학에 재직하는 경우가 허다했으나¹³⁾ 사서들에게 이러한 복권의 기회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Greifswald 대학도서관 부관장 Kurt Gassen, Halle 대학도서관 부관장 Fritz Juntke, Jena 대학도서관의 Wilhelm Schmidt는 예외에 속했다. 이들은 나치당원이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으나 도서관의 인력난으로 다시 복직된 경우에 속한다. 아주 특별한 복직의 경우는 Hans Mueller이다. Jena 대학도서관 부관장이었던 그는 나치정당의 회원이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으나 Karl Marx에 관한 논문을 발굴한 공로로 복직되었다¹⁴⁾.

동독에서 복직되지 못한 고급전문사서들은 서독의 도서관에서 그에 상응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경우도 상당했다. 그 예로는 Greifswald 대학도서관 관장 Walter Menn은 1946년 Mainz 대학도서관 관장으로, Jena 대학도서관 부서장이었던 Victor Burr는 1947년 Tuebingen 대학도서관 부관장으로 옮긴 후 다시 Bonn대학도서관 관장으로, Leipzig 대학도서관의 Fritz Prinzhorn은 Bremen의 연구소도서관으로 옮긴 후 다시 서독 수도였던 Bonn의 외교안보연구소도서관장으로 활동했다¹⁵⁾.

11) H. Maskolat, *Der Beginn der demokratischen Hochschulreform an der Berliner Universitaet in der Periode ihrer Wiedereroeffnung 1945/46*. Diss. Berlin, 1967(Mschr.). p. 184ff.

12) M. Komrowski, "Die Auseinandersetzung mit dem Nationalsozialistischen Erbe im Wissenschaftlichen Bibliothekswesen nach 1945", *Bibliotheken waehrend des Nationalsozialismus*, Teil II. Wiesbaden. 1992. p. 280.

13) R. Jessen, "Zur Sozialgeschichte der Ostdeutschen Gelehrtenschaft(1945-1970)", *Historische Forschung und sozialistische Diktatur*. Hrsg. v. M. Sabrow und T. Walther. Leipzig. 1995. p. 126ff.

14) Komrowski. *op cit*. p. 288ff.

15) G. Lohse, *Die Bibliotheksdirektoren der Ehemals Preussischen Universitaeten und Technischen Hochschule 1900-1985*. Koeln. 1988. p. 233, 240ff.

나치당원이었던 사서들이 도서관을 떠난 자리는 동독이라는 새로운 국가사회시스템에 긍정적 경향을 보이는 새로운 엘리트들로 채웠다. 전쟁 후 소련 점령지역에서 공산주의 지도체제를 강행하기 위해 사회조직체제를 변혁하는 조건에 적합한 인력을 찾는 업무가 도서관에서도 예외일 수 없었다. 이러한 인력이 도서관에서 어떻게 구성되어가며 이러한 새로운 제도적 과정에서 사서들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어떠한 직업관을 의무로 여겨야 하는가를 다음 장에서 알아본다.

4.2 사서의 정당성(政黨性)대 객관성: 학술도서관 사서의 직업관

6년간의 전쟁과 12년간의 민족사회주의 독재의 청산과정에서 학술도서관 사서들은 국가와 사회에서 그들의 역할을 새롭게 재고할 계기를 갖게됐다. 이를 계기로 사서 직업관에 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했다. 1946년 소련점령지역의 학술,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모임에서 독일 국민교육청장인 Paul Wandel은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¹⁶⁾. “사서들의 업무는 도서관 장서를 객관성 있게 관리하고 국민에게 흥미거리를 제공하는데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 가치를 수반한 교육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있다. 사서들은 새로운 (공산주의)이상을 민중 속에 주입시키는데 도움을 줘야하며, 이는 동시에 독일의 과거 문화유산을 생동적으로 만든다”고 했다. 그의 연설은 독일 공공도서관 사서의 교육적 기능을 학술도서관 사서도 예외로 요구했고 또한 “넓은 층의 민중들을 진정으로 돕고, 그들이 자유로워지고, 제대로 사고 할 능력을 기르는데”는 사서의 자료선택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서들에게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하며 “구시대의 사람들은 새로운 과제에 걸맞게 새로운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로운 국가에서 학술도서관 사서의 직업관에 관한 격렬한 토론은 당시 도서관계 학술지에 게재된 베를린 국가도서관총장 Rudolf Hoecker의 기사에서 출발했다¹⁷⁾. 그는 사서는 학자들의 연구의 진행에 관한 포괄적인 윤곽, 과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학문의 고문으로서 또는 비판자로서 학술적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학술연구에 대한 평가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서의 위와 같은 업무 영역을 위해서 사서의 활동 범위를 도서관 업무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도서관 전문학술지의 출판에 관한 저작권 신청을 검열하는 문화산업분야의 자문위원으로까지 확대시켰다. 즉 그는 사서는 “진보적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16) "Die erste Tagung der Bibliothekar der sowjetischen Besatzungszone vom 4. bis 6. Oktober 1946 in Berlin. Ansprache der Deutschen Verwaltung fuer Volksbildung, Paul Wandel", *Der Volksbibliothekar* Jg. 1(1946), p. 61 ff.

17) R. Hoecker, "Zwei Jahrgaenge Zentralblatt fuer Bibliothekswesen", *ZfB* Jg. 62(1948), p. 258ff.

시대정신(Zeitgeist)을 갖추어야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사서의 문화와 정치적 기능을 강조했다.

Hoecker가 학술도서관의 전통적인 업무 영역을 벗어나 정치, 문화적, 사회적 기능을 강조한 반면 라이프치히 출판업상 협회장인 Heinrich Becker는 일상적인 사서의 업무에 새로운 기본방침을 제시했다. 그에 의하면 사서는 상황에 따라 이용자의 정신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문제에 객관적으로 대처하여 어떠한 특정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 주장은 사서는 이용자의 자료요구에 대해 이용자를 자문하고 또한 사서의 개인적인 입장을 밝힐 수 있음을 의미했다¹⁸⁾. 이에 반해 유명한 Tuebingen 대학도서관장인 Leyh는 학술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사서의 기능을 완전히 구분하였다. 학문의 결과는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도서관생산은 자연히 이에 따라 아무런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한다. 학술도서관의 사서는 그 시대의 도큐멘트를 자료로서 가치의 평가 없이 있는 그대로 모두 수집해야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도서관장서의 특정 이데올로기 편향성을 강력히 반대했다. 그러나 그도 국민교육의 촉진은 공공도서관의 과제라고 여겼다¹⁹⁾.

이러한 특정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사서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인 Leyh는 소련 점령지역과 동독에서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기본으로 한 그의 사서직 업무수행은 자본주의 시대의 유물이라는 낙인을 찍히기도 했다. 그러나 그도 사서와 도서관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중립성을 유지할 수 없으며 항상 그 사회 지배계급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사회주의 사서의 중요한 특징은 그 사회를 지배하고있는 정치 시스템을 지지하는 정당을 솔직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²⁰⁾. 이 시점에서 그는 사서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재건하는데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함으로써 현실에 수긍하는 입장을 취했다. 막스-레닌주의를 기본 개념으로 노동자계급을 대변하는 사서의 직업상은 당연히 정당과 직결되어있었다. 그리하여 사서는 학문의 본질을 규정하는 요소, 즉 도서 선정에 있어서 정치성을 배제 할 수 없었고, 결국은 정당의 이상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결과적으로 학술도서관은 당과 국가의 하수인으로 전락되었다. 이렇게 학술도서관에 요구된 사항은 1951년 “서독 재무장에 대한 투쟁”이라는 정치적 슬로우건에 따라 사서들의 업무방향도 결정되었다. 결국 사서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정치가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체제전환기에 있는 국가발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²¹⁾. 그러나 당에서 그들의 원칙과 결부시켜 학술도서관 업무에 여러 가지 요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그보다 당에서 그들이 요구하는 사서의 사회적 의무와 과제를 도서관 업무에서보다 그들의 정

18) H. Becker, "Objektivität des Bibliothekars - eine Tugend oder eine Schwäche? Eine Diskussionsbeitrag", *ZfBB Jg* 79. H2 (1965), p. 261f.

19) Leyh, *Der Bibliothekar. op cit.* p. 158.

20) Leyh, *ibid.* p. 158.

21) H. Roloff, "Die Arbeitsbesprechung der Direktoren der wissenschaftlichen Bibliotheken der DDR in Berlin am 28. und 29. Sept 1953", *ZfB. Jg* 17(1953), p. 344.

당관련 단체의 활동에서 찾음으로서 새 국가체제에서 과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사서들의 정당관련단체의 조직원나 회원가입 등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당은 이러한 단체활동을 통해 사서가 도서관 내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국가를 위해 정치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간(politisch denkender und handelnder Mensch)형이 되기를 원했지만²²⁾ 이러한 당의 사회주의적 교육인 당의 요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됐는가는 다음의 장들에서 다루었다.

4.3 사서의 전문직 교육과 사회주의 교육

4.3.1 전통과 변혁 학술도서관의 사서교육

사서의 인력난은 도서관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인력난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하기 위해 국립도서관은 1946년에 이미 학술도서관사서의 교육을 Assistent und Doktoranden이란 명칭으로 시작했다. 과거와 같이 고급전문사서명칭인 Referendare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당시 인력수급의 급박성 때문에 과거처럼 정규교육과정보다는 단기과정으로 즉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였다. 독일 민중도서관 관리국(Deutsche Verwaltung fuer Volksbibliothekar)은 1947년 임시 학술도서관 사서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시험 규정을 발표했다²³⁾. 이 규정은 의식적으로 1928년 나치시대 이전의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내용만 약간 변경하였다. 입학조건은 과거처럼 석사나 박사 학위 소지자이며, 교육기간은 2년으로 그 중 첫 1년은 대학도서관에서 실습을 통하여 도서관 전반 업무내용을 익히고 2년째는 이론교육이다. 이 교육과정에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변화는 이론교육에서 시사·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사회·정치적 교과목의 신설이었다. 이 과목의 신설은 사서들에게 새로운 정치시스템을 인지시켜 그들의 업무에 직접, 간접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여기서 예비사서들은 이념교육의 강화책으로 막스-레닌주의의 역사학자 Alfred Meusel의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해야했다²⁴⁾.

1951년부터는 사서의 수급에 따라 계획적인 사서양성교육과정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의 특징은 그 당시까지 인문계열의 학술도서관사서의 공급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균형을 이루도록 자연계와 이공계열의 사서양성에 비중을 두었다. 특히 사서지원자의 자

22) H. Trepe, "Bericht ueber die Tagung der Leiter der wissenschaftlichen Bibliotheken des Landes Sachsen am 3. und 4. Maerz 1950 in Dresden", *ZfB*, Jg. 64(1950), p. 287.

23) W. Haenisch, "Bericht ueber die Tagung der Bibliothekare der sowjetischen Besatzungszone vom 4.-6. Okt. 1946 in Berlin", *ZfB*, Jg. 61(1947), p. 85f.

24) J. Votius, "Die Ausbildung der Anwaerter des hoeheren Dienstes an der Oeffentlichen Bibliothek in Berlin", *ZfB*, Jg. 63(1949), p. 81.

격을 요구된 조건이외에도 지원자의 사회적 정치적 활동에 큰 비중을 두었으므로 정치적으로 신임할 수 있는 인력의 모집에 노력했다. 그 예로 2기 교육과정에서는 참가자 20명중 7명이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 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당원이었고, 3기 과정에서는 15명의 후보자중 6명이 당원이었다. 평균적으로 교육과정에 참여한 후보자들 중 60%가 정당의 당원이었다²⁵⁾.

1954/55년 베를린의 훔볼트대학에 5년 과정의 도서관학 학부과정이 신설되면서 그때까지 2년 교육과정은 중단됐다. 학부과정 개설의 목적은 도서관학과 다른 전공과목을 복수전공으로 하여 다른 학분 주제분야에 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고급주제전문사서를 배출하는데 있었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4년째에 6주간의 현장실습을 의무화했다. 이러한 교육과정 후 고급주제전문사서를 임용할 때는 특정주제 전문분야의 전문성도 중요했지만 그보다도 국가가 원하는 정치적 신념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그러나 학부과정 출신의 사서들로는 국가가 원하는 체제 지향적 사서의 모집에 한계가 있었다. 국가에서 원하는 대로 마스-레닌주의 사상을 도서관학 학부의 기초과목으로 삼는데는 문제가 있었다. 도서관학 교수에게 마스-레닌주의에 입각해서 교육을 요청했지만 국가와 당에서 요구하는 대로만 따르기에는 구조적으로나 인력면에서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도서관학 교수진이 정치적 강제성을 소화하기에는 사상적으로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으며 또한 당에서 요구하는 인력 역시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었다²⁶⁾. 그리하여 1959년부터는 도서관학을 전공하지 않고도 도서관학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국가시험자격은 도서관학 전공대신 사회과학 분야의 특정 전공 이수, 충분한 외국어 실력, 논문, 필기와 구두시험. 학술도서관에서의 오랜 경험 등이었다.²⁷⁾이 국가시험을 통해 사서직에 임용될 때에도 임용자의 투철한 정치적 신념은 당연히 빼어 놓을 수 없는 조건이었다.

4.3.2 이데올로기 중심의 사서계속교육

도서관직원들에게 특정 정치적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사서계속교육프로그램이 잇따라 개최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전쟁 후에는 천천히 시작되었다. 학술도서관의 기능과 과제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리의 과정에서 계속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은 노동자 운동의 역사나 마스-레닌주의의 연구 이외에 진보적인 학술지나 일간지의 강독들이었다²⁸⁾. 사서를 위한 정치적

25) H. Gittig, "Die Referendarausbildung an der Deutschen Staatsbibliothek", *Arbeitsergebnisse eines Kolloquiums zu Ehren von Horst Kunze*, Berlin, 1988, p. 12.

26) "Die bibliothekarische Ausbildung in den europäischen sozialistischen Ländern", *ZfB*, Jg.79(1965), p. 29f.

27) K. Brueckmann und W. Imscher, "Einheitliche sozialistische Bildungssystem und die Ausbildung von Kadem fuer wissenschaftlichen Bibliotheken", *ZfB*, Jg. 78(1964), p. 717.

계속교육은 도서관에 위임하였다. 새로 임용된 사서들은 이미 교육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사상을 검증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은 주로 오랜 동안 도서관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치적 계속교육의 대표적인 예는 1953년 당시 동독의 국립도서관인 독일도서관에 신설한 사내학교를 들 수 있다. 이 사내학교의 창설자는 이 도서관의 부관장이었던 Kurt Bruckman이었다. 그는 혁명적인 기세로 새로운 사서의 발전을 위해 이데올로기 논쟁을 주도하는데 앞장섰다²⁹⁾. 이 사내학교는 처음에는 8개월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했으며, 이 교육과정에는 학술도서관 사서, 기능직 사서, 일반직원들이 주 단위로 돌아가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교육의 내용은 주제전문지식, 문화행사, 예를 들면 마스주의의 이론이나 혹은 “평화와 통일”, “사회주의의 무기인 도서”를 주제로 한 강연 등이었다. 특히 학술도서관 사서를 위한 사회 정치적 강연은 주로 철학에 중점이 맞추어졌다. 이 사내교육기관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직원에게는 진급에 우선권을 줬다. 이 교육에 대한 공감대는 즉시 첫 해부터 참여자의 숫자로 나타났다³⁰⁾. 첫 해 1953/54년에 250명의 직원 중에서 108명이, 1954/55년에는 108명이 참여했다. 60년대 초에는 참여자의 수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1961/62년에는 350명의 직원 중 190명이 참여할 정도였다. 도서관내에 이러한 사내학교의 설치에 이 독일도서관이 모델이었고 그 외의 학술도서관에서는 이 도서관에서처럼 체계적이라 기보다는 몇몇 강좌형식으로 진행되었다.

4.4 사서의 전문성과 정치적 갈등

4.4.1 도서관장

국가행정과 당의 책임자들은 학술도서관을 정치적으로 도구화하는 성공의 열쇠는 사서의 역량에 달렸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도서관을 대표하는 도서관장의 선임에는 그들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다루는 도서관장들은 전쟁이 끝난 직후부터 1950년 사이의 기간과 동독 국가체제가 잡혀진 후에 임명된 두 종류로 나누어서 다룸으로써 동독 도서관의 정립과정을 추적해본다.

전쟁 전에 임명되었던 도서관장 8명중 탈나치화 후에는 2명만이 계속 관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 2명은 라이프치히 독일도서관 관장인 Helmut Uhlendahl과 Rostock 대학도서관

28) Roloff. Die Arbeitsbesprechung. *op. cit.* p. 347, 351.

29) H. Roetzsch und H.-M. Presske, "Die Deutschen Buecherei", *Jahrbuch der Deutschen Buecherei*. Jg. 23(1987), p. 86 .

30) Schaaf. *op. cit.* p. 76f. 85.

관장인 Claussen 이었다³¹⁾. Uhlendahl은 1924년부터 분관장 1938년 총관장으로 독일 대표했고 국제적 명성을 누렸던 도서관 전문인이었다. 그는 나치시대에도 민족사회주의독일노동당(NSDAP) 당원이 아니었고, 전쟁 후에도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쟁 직후에도 이 두 사람은 비정치인으로 머물렀음에도 불구하고 새지도자의 재임을 받았다. Claussen은 1949년 동독이 국가로서 체제를 정비하면서 갑자기 은퇴를 하게되어 정치적인 동기라는 의견이 분분하였다³²⁾. 그의 후계자로는 사회학과 사회운동사의 전공인 교수 Heinz Herz가 임명되었다. 도서관 전문직으로서의 경험이 전무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장에 임명된 것은 그가 독일사회주의통일당원이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 라이프치히와 Rostock도서관 이외 다른 6개 대학도서관은 전쟁 직후 새로운 관장들이 임명되었다. 베를린 국가도서관과 베를린 대학, 베를린 공과대학 3개 도서관의 책임은 임시로 Rudolf Hoecker가 맡았다. Hoecker는 1930년부터 1933년까지 베를린대학도서관 관장이었으나 1933년 나치시대에는 독일사민당(SPD) 당원이었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었다³³⁾. 그는 1936년에는 다시 베를린 공과대학 도서관위원으로 임명되었고, 전쟁 후에는 다시 사민당 당원으로서 노련한 학술도서관 고급사서로서, 나치시대 잔재의 정리자로서 활동을 재개하였다. 그는 동독의 새로운 국가시스템에 열정적으로 참여한 사서중의 한사람으로서 사서 업무 이외에 사민당의 사회주의 문화센터에서 적극적인 활동 영역을 넓혔다. 그는 이를 계기로 동독에서 사서로서는 드물게 개정된 “공산당 선언문” 서문의 집필자에 포함됐다³⁴⁾.

Hoecker가 관장했던 베를린 3곳 도서관은 1946년 분리되어 각각의 도서관장을 임명하였다. 그는 국립도서관 관장에 정식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소련공산당(KPD)과 사민당이 합당하자 독일사회주의통일당으로 이적하였다. 그는 신념을 가진 사회주의자였지만 독일국민교육청과 마찰을 빚었다. 그는 반동주의적 직원을 보호했고 비전문직을 고용했다는 비난과 함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었다.

그 외 4곳의 대학도서관은 1945/6년 임시관장이 임명되었으나 3곳은 다시 즉시 교체되었다. 라이프치히 대학도서관장은 나치시대에 망명을 한 후 전쟁 후 도서 검열업무에 종사했던 Otto Kielmeyer가 임명되었다. 그는 전문도서관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독일사회주의통일당원이었다. Halle대학도서관은 1945년 Weissborn이 관장하였다. 그는 1911년 이후부터 계속 이 도서관에서 근무한 비당원 전문도서관이었지만 관장으로 임명된 몇 달 후에 관장직에서

31) Schaaf, *ibid.* p. 70f.

32) Carl Meltz, "Bruno Claussen zum Gedenken", *ZfBB* Jg. 6. H. 6(1959), p. 399.

33) A. Habermann, R. Kelmment und R. Siefkes, F., *Lexikon der Deutschen Wissenschaftlichen Bibliothekare 1925-1980*. Ff a. M. 1985. p. 128.

34) G. Dietrich, *Politik und Kultur in der Sowjetischen Besatzungszone Deutschlands(SBZ) 1945-1949*. Bern. 1993. p. 39.

사퇴했다. 독일소련군사행정부(SMAD)에 의하면 그의 퇴임은 국가사회주의문헌의 정화작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의 후계자는 오랜 도서관 근무경험을 가지고 또 동시에 독일자유민주당(LPD) 당원이었던 Franz Zimmermann이었다. 그러나 그도 전쟁포로에서 Horst Kunze가 돌아오기까지 잠정적 해결사였을 뿐이었다. Kunze는 도서관학적 지식과 학문적 지식을 새로운 국가의 정치적 체제에 접목을 시킨 도서관 행정가며 또한 분명한 마스주의자였다. 1949년에 SED의 당원이 된 그는 1950년까지 Halle 대학도서관에 머물다가 베를린국립도서관 총관장으로 임명되었다³⁵⁾. Jena대학도서관에는 임시관장으로 1946년 Karl Bulling가 임명되었다³⁶⁾. 그는 1차 대전으로 인해 고급전문주제사서교육을 끝마치지는 못했었지만 도서관 전문인이었고 동시에 독일자유민주당 당원이었다. 그의 후임으로는 베를린 공과대학도서관 부서장이었던 Albert Predeck가 임명되었다. Greifswald대학도서관 임시관장 Wilhelm Braun은 1945년 1년 동안 관장으로서의 임무수행후 예외적으로 재임용 된 경우에 속한다³⁷⁾. 그는 어느 정당의 당원도 아니었지만 그 당시 적임자가 없었다는 운이 작용하기도 했고, 시립도서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술도서관에서 학술도서관 보조자로 출발한다는 그의 겸손한 직업의식에 대한 태도가 그를 1955년 정년퇴임까지 머물게 했으며, 그는 그가 선서한 도서관에 최선을 다했다.

위의 여러 도서관 책임자들의 약력이 보여주듯이 1950년 이전의 관장직 임명은 주로 도서관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몇몇은 정당의 당원이라는 사실이 관장직 임명에 영향을 미쳤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1950년까지는 학술도서관에서 공산주의 지도자의 요구를 강제로 관철시키지는 못했다.

그러나 1950년부터 60년대 중반까지 새로운 도서관장들이 교체되었다. 교체된 도서관장의 이력에는 정당의 당원 경력이 거의 필수였으며 심지어 “노동자계급의 정당”의 멤버쉽은 도서관장의 전제조건이었다.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은 모든 도서관의 책임자급을 사회주의 핵심멤버로 채워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했고, 또 총무처에서는 심지어 브르조아적이고 반동주의적인 세력을 도서관 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할 정도였다. 그 결과 60년대 초까지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도서관장의 임명에 공산주의 지도층의 의견이 관철되었다. 새로 임명된 도서관장들은 대부분 학술도서관 고급사서전문과정을 이수한 전문인이면서 동시에 독일사회주의통일당원이었다.

35) *Wer war Wer in der DDR*. Ff. a. M. 1995. p. 426.

36) K. Marwinski, *425 Jahre Universitätsbibliothek Jena 1558-1983*. Kurzgefasste Bibliotheksgeschichte. Jena, 1983. p. 67f.

37) W. Braun, *Aus der Geschichte der Universitaet*. Festschrift zur 500-Jahrfeier der Univeersitaet Greifswald 17.10.1956. Bd. 1. Greifswald, 1956. p. 195f.

4.4.2 불온세력의 강제퇴직

1951년 총무처고등교육과가 신설된 즉시 학술도서관은 업무심사위원의 감사를 받았다. 도서관 업무의 감사를 근거로 Jena대학도서관의 관장 Predeck는 정직을 당했다. 업무심사위원회가 작성한 그의 업무 과실은 다음과 같다³⁸⁾. 이용이 금지되었거나 제한적으로만 이용이 허용된 도서의 관리가 허술했고 또한 이러한 자료들은 도서관목록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금서 역시 상부의 지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자료의 선택과 정리도 기준 없이 처리됐고 막시즘-레닌니즘에 관한 도서들은 이용자들의 눈에 띄지 않은 구석에 방치됐다. 또한 연속간행물 열람실에서는 소련에서 발간된 자료가 빈약했고, 도서관 중앙 로비에 세워진 Karl Marx의 동상도 예술적 가치가 떨어진 작품이었다. 최신 신착도서의 열람 역시 서방세계 이데올로기 지향적인 도서의 중심이었다. 업무심사위원회가 지적한 위의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비난의 초점은 이 도서관의 수서정책이었다. 이 도서관은 막시즘-레닌니즘 관련도서나 소련의 출판물들의 구입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 즉 서방세계의 도서의 수집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한 도서관 자료구입비를 대부분 불필요하고 사상적으로 유해한 서방세계의 자료에 지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외에도 Predeck는 개인적으로도 독일사회주의통일당에서 운영하는 계속교육에 참여하지 않았었다. 이 도서관의 지하실에서는 나치교양도서와 브로슈어 이외에도 미국에서 출간된 군대훈련교양도서가 상자 채로 발견되었다. 이 사실은 국가안전기획부에 보고됨과 동시에 자료 역시 상부에 반납되었다. 그 결과 도서관 부관장은 Predeck가 망명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라는 상부의 명령까지 받았다³⁹⁾. 그 당시 이 Jena대학도서관은 “이데올로기적 실패와 최고의 도서관 경영”이라는 두 종류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⁴⁰⁾. 이 Jena 대학도서관은 국가 체제유지 측면에서 보면 자료의 내용이 반 국가 이데올로기적이었으나 도서관 이용자의 측면에서는 이용자의 요구에 충실하려는 도서관 수서과장 Karl Kujath와 그를 보호했던 관장이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도서관 운영의 성공사례에 속했다. 그를 즉시 해고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Jena대학교수들의 반발을 우려해 행동에 옮기지 못했다. 그는 당시 이 분야에서 국제적인 명성을 바탕으로 자료의 국제교류에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도서관 업무의 위축을 우려해서 그를 즉시 해고하기는 어려웠다. 총무처와 대학은 다각도로 Predeck의 행적을 조사한 결과 그를 도서관장으로 임명한 그 자체를 실수로 인정하여 처음에 그를 장기 휴가에 보낸 후 후임자를 임명했다.

도서관에서는 그를 완전히 해고시키느냐 아니면 그를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는 업무를 찾는가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답은 그의 정치적인 판단으로

38) K. Kujath, *Wiederaufbau der Friedrich-Schiller-Universitaet, Jena* 1993, p. 111f.

39) Kujath, *ibid.* p. 102f.

40) Kujath, *ibid.* p. 111.

해결 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의 반역적 행동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 더 나아가서 그의 서방세계 도서관과의 국제교류는 그가 스파일 가능성이 있다는 데까지 비화되었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여러 가지 행적으로 보아 그는 서방세계의 프로파간다를 조장하는 반동분자일 뿐만 아니라 스파이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의 공식적인 죄목은 반파시스트적이고 민주적 규정에 역행하는 도서관장 업무의 태만이었다. 그의 죄목에 스파이 행위를 삭제한 결과 그는 베를린자유대학 도서관학 초빙교수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1956년 생을 마쳤다⁴¹⁾. 물론 Jena 대학도서관장의 사례는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사례는 다른 도서관장들에게 묵시적인 경고였다.

4.4.3 도서관 직원과 정치단체와의 관계

국가와 당은 도서관장을 독일사회주의통일당원 중에서 선임하는데 주력하였고 도서관 직원 역시 가능하면 정당 당원을 선호했다. 특히 환영받은 도서관인으로서 독일사회주의통일당과 근접한 노선에 있는 대규모 조직인 독일자유노조연맹(FDGD)의 멤버였다. 전쟁 후 초창기에는 도서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독일사회주의통일당원들이 학술도서관에서 확고한 지지기반을 구축하였으나 1952년에는 3분의 1로 감소했다⁴²⁾.

대학도서관 직원의 정당 가입은 대학 교수진에 비해 훨씬 낮았다. 도서관인의 정당가입에 서도 도서관 하위직원들은 사상적으로 노동자-농민당과 더 밀접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학술도서관 사서들의 정당가입은 일반도서관직원보다 그 비중이 낮았다. 60년대 들어서면서 도서관 임원이나 직원의 정치성은 점점 회박해져 어떠한 홍보작전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의 숫자를 만회할 수 없었다.

도서관 직원을 이데올로기의 굴레에 묶는 방법은 국가정당의 당원으로 만드는 법 이외에도 다양한 국가사회단체의 회원에 가입시키는 법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서관 직원이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정당에 가입하는 수는 줄어드는 반면 이들이 독일자유노조연맹에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은 거의 의무화되어갔다. 이 연맹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은 사상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또한 직장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노조연맹에 가입한 도서관인들은 정당의 권유로 정치적인 문제, 이데올로기 훈련, 사회주의 교육에 깊이 관여했고 또한 사회 문제와 노동조합에서 다루어야 하는 임금과 근무여건과 같은 문제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외에도 당에서는 도서관 직원들에게 문화동맹회원, 독일-소련친선단체회원, 독일 민주주의 여성동맹(DFD)회원 등등 다양한 단체의 회원 가입을 권장했다.

41) Habermann, Klemmt, Siefkes. *op. cit.* p. 254.

42) R. Jessen, "Professoren im Sozialismus. Aspekte des Strukturwandels der Hochschullehrschaft in der Ulbricht-Aera", *Sozialgeschichte der DDR* Hrsg. von Hartmut Kaelbe u. a. Stuttgart. 1994. p. 241.

4.4.4 서방세계로의 탈출과 베를린 장벽

동독의 정치체제에 적응할 수 없었던 사서를 포함한 동독 시민들은 그들의 정치적 의견의 불일치를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 첫 번째는 정치적 입장을 밝혀야 하는 분야를 떠나서 비정치적 분야에서 직업을 찾는 방법이었다. 두 번째는 국가의 충성에 대한 서약을 포기하는 방법이며, 이 방법은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세 번째 방법과 직결된다. 세 번째 방법의 선택은 동독을 떠나 서방세계로 망명하는 것을 의미했다.

1949년과 1961년 사이 270만 명이 세 번째 방법을 택했으며 사서들 역시 여기에 포함되었다⁴³⁾. 1950년과 1959년 사이 동서독 사서연감에는 8개 대학 도서관 205 명의 제1급 고급전문 사서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54 명이 동독을 떠났다⁴⁴⁾. 서독으로 이주한 사서들이 도서관에 근무할 경우에만 사서연감에 수록되므로 그 숫자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에서 특히 베를린은 한 도시가 동과 서로 분단되어버렸기 때문에 2곳의 국립도서관급의 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이 집중된 베를린 사서들의 이동은 타도시보다 더 심했다. 서독으로 이주한 사서들은 이산가족의 경우이거나 또는 직업 전전에서 성공을 목적으로 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정치적 요소가 탈주의 결정적 동기였다. 동독 사서들의 이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과 노동조합은 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은 이주를 준비하고 있는 사서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고 또한 이미 이주한 사서들을 혹독하게 비난함으로써 남아있는 직원들을 위협하고 모방행동을 못하도록 겁을 주기도 했다.

1960/61년 들어서 탈주자의 수가 급증하여 1961년 8월 13일 엑소도스를 막기 위해 마침내 국가 지도부는 인민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베를린 장벽을 세웠다. 동독의 도서관학 학술지인 “Zentralblatt fuer Bibliothekswesen”에는 베를린 장벽은 인민의 생명, 자유, 안정을 위해 동독 정부에서 심오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내린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긍정적 성명서를 발표했다⁴⁵⁾. 동독에서는 베를린 장벽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 대한 무단정치를 택한 서독의 보복 정책가들한테 있다고 주장했다. 도서관계에서는 이미 베를린 장벽에 대한 도서관인들의 긍정적인 의견을 성명서를 통해 밝혔지만 이 의견은 왜곡되었다는 주장도 있었다⁴⁶⁾.

베를린 장벽 설치 후 동독 국립도서관인 독일도서관 직원들의 동요가 수그러들었다. 동베를린 국립도서관 직원 수는 여러 가지 이유로 도서관을 떠난 사람도 있었지만 1960년에 112명에서 1962년 94명으로 감소되었고, 그 후 1963년과 1964년 사이에는 3명만이 탈주자로 기록되었다⁴⁷⁾. 서독으로 탈주한 전문인력의 감소는 도서관 운영에 큰 타격을 가했다. 이러한

43) J. Kocka, “Eine deutscher Sonderweg. Ueberlegungen zur Sozialgeschichte der DD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Bd 40(1994), p. 37.

44) *Jahrbuch der Deutschen Bibliotheken* 21/22(bis 40), 1931(bis 1963), Leipzig/Wiesbaden 1931(bis 1961)

45) R. Casper, “Oberstes Gesetz unserer Politik ist der Friede”, *Das Stichwort*, Nr. 15, vom 8(Sept. 1961).

46) K. Brueckmann, “Die wissenschaftliche Bibliotheken und der Frieden”, *ZfB*, 76(1961), p. 434.

전문인력의 빈자리는 결국 비전문인으로 보충되었다. 특히 베를린대학도서관의 경우 베를린 장벽으로 인해 서베를린 거주 사서들은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잃어야 했다.

베를린 장벽 후 동독에 남아있던 도서관 직원들의 행동에 변화의 조짐이 관찰되었다. 베를린 국립도서관에서는 동베를린을 떠난 사서들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었다. 이들은 서독으로 떠나기 마지막까지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동독의 사회주의 국가체제의 제도 변화에 적응을 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했다. 라이프치히 독일도서관에서는 베를린 장벽 이후에는 저항세력이 느슨해져서, 즉 떠날 사람은 떠났기 때문에 차라리 이들 도서관의 지속적인 주요업무 수행이 수월해졌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이 변화는 남아있던 사서들의 자포자기적 심경의 반향이었다. 베를린 장벽으로 인해 서방세계로 갈 수 있다는 기대감마저 아예 상실한 동독의 사서들은 직면한 정치사회 환경에 맞추어 갈 수밖에 없었다.

5. 학술도서관의 장서

5.1 파시스트적 문헌과 호전(好戰)적 문헌의 정화작업

새로운 국가건설에 반체제적이거나 외설적인 서방세계의 외국도서는 검열의 대상이 되었다. “금서는 권력(혹은 지배자)에 대립하는 내용을 가진 서적이다. 권력은 정치, 경제, 사상이라는 하위구조를 통하여 창출, 유지되는 것으로서 권력의 고유한 성격에 따라 금서의 성격이 특징 지워진다”⁴⁸⁾. 도서관에서의 검열은 자료이용에 대한 금지(ban), 방해(prohibit), 은폐(suppress), 배척(proscribe), 제거(remove), 레이블링(labeling), 자료 일부의 삭제(delection)와 절단(excisiom) 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일체의 접근을 제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⁴⁹⁾. 동독에서 도서의 검열 작업은 모스크바 망명에 있던 공산주의자들이 “소련 적군지역 업무규정”에 따라 민족사회주의와 전쟁 선동적인 불온도서를 서가에서 제거하면서 시작됐다.

세계 2차 대전을 전후로 세계는 냉전시대의 이념적 대립 양상으로 혼란시기에 접어들었다. 이때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을 중심으로 제국주의적 군부파쇼가 우익논리를 주도하고있었고 반면 소비에트 러시아는 신경제정책의 혁신적인 생산력에 고무된 진보적 변혁의 세력

47) Brueckmann. Das einheitliche *op. cit.* p. 719.

48) 이종연, 『책의 운명』. 서울: 해안, 2001. p. 20.

49) ALA. OIF. Chicago, 1996. p. xx.

이 확산하는 중이었다. 이러한 와중에 도서관 업무에서는 패권적 정치세력에 의한 당파중심의 검열이 단행되었다. 시 당국의 국민교육과는 소련 적군지역 업무규정에 따라 학교, 도서관과 모든 연구소와 기관에 있던 민족사회주의적이고 군국주의적이며 반동주의적인 장서의 제거를 담당했다⁵⁰⁾. 포츠담 협정에 명시된 대로 이 규정은 민족사회주의를 뿌리 채 뽑고 새로운 독일의 건설을 위한 정신적 무장의 수단으로서 활용됐다. 도서관은 몇 년 동안에 걸쳐 반체제적인 장서를 점검해서 이러한 장서는 이용자에게 비밀로 부치거나 또는 당국에 신고해야만 했다⁵¹⁾.

전쟁 첫 주에는 도서관장서의 정화 작업이 특정 기준 없이 무질서하게 수행됐다. 불온도서관의 제거작업은 해당 관청의 주무부서, 시장, 주 의회, 반파시스트위원회나 도서관장들에 의해 자체적으로 수행됐다. 장서의 선별 작업은 공공도서관 쪽에서 폭넓게 이루어진 반면 학술도서관에서는 공공도서관보다 강도가 낮았다. 두 번째 단계인 1945년 7월과 8월에는 민족사회주의적 장서의 선별 작업은 주의회의 특정 방침에 따라 행해졌다. 작센지방의 방침에서는 124명의 작가와 8개의 파시스트 출판사들이 지목되었으며 Tuebingen 의 방침에는 금서리스트가 내려오기도 했다⁵²⁾. 또한 주 행정기관과 소련 군사행정부에서는 도서관장서의 선별을 대규모 학술도서관의 의무사항으로 삼았고, 심지어 대학도서관을 다시 개관할 때는 장서의 선별을 조건으로 내걸기도 했다⁵³⁾. 이러한 상황에서 특수 장서는 학술 연구에 필요 불가결하다는 대학 측의 반론도 아무런 대안이 되지 못했다.

장서의 정화작업에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킨 곳은 Halle대학에서였다⁵⁴⁾. 1945년 소련군사행정부의 대학 총장에게 3주 내에 나치관련 장서를 비밀로 하라는 지침(명령)을 내렸다. 이 대학도서관은 그들 장서를 점검한 결과 약 8,000권을 선별하여 아카이브에 보관했다. 1946년 독일 소련군사행정부는 도서관을 감사한 결과 선별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1946년 1월에 개관한 도서관을 다시 폐관토록 조치했다. 그 결과 도서관은 다시 장서의 선별작업을 더욱 세밀히 수행한 후 그 해 10월에 개관했다. 선별된 장서는 11,000 권으로 집계됐다⁵⁵⁾. 이 사건은 단순히 장서의 선별로 끝나지 않고 대학도서관장에 책임을 물어 관장을 파면시키고 대학 총장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50) U. Steigers, "Die Mitwirkung der Deutschen Bucherei an der Erarbeitung der "Liste der auszudonkeenden Literatur" in den Jahren 1945 bis 1951", *ZfBB. Jg.* 38, H. 3(1991), p. 237.

51) Steigers. *ibid.* p. 238.

52) L. Winckler, "Kulturelle Erneuerung und gesellschaftlicher Auftrag", *Studien und Texte zur Sozialgeschichte der Literatur*. Bd 20(1987), Tuebingen. p. 6ff.

53) Scheschonk. *op. cit.* p. 39.

54) B. Scheschonk, *Die Entwicklung der Universitäts- und Landesbibliothek Sachsen-Anhalt in Halle(Saale) von 1945 bis 1983*. Halle, 1989. p. 15f.

55) "Dokumente ueber die Aussonderung der Nationalsowialistischen und militaerischen Literatur in den Bibliotheken", *ZfB. Jg.* 62(1948), p. 129.

독일소련점령지역에서의 장서 선별작업은 1945년 7월부터 소련군사행정부의 국민교육과에서 체계적으로 진행시켰다. 국민교육과 책임자와 독일도서관장 등과의 회담 결과 독일도서관 대표들은 출판사, 도서관, 서점의 정화작업에 필요한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에 따라 독일도서관은 금서목록 작성을 위임받았다. 이 규정에 속하는 장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행본, 부로슈어, 학술지, 앨범과 그 외 자료, 파시스트 프로파간다, 인종차별이론, 외국의 침략에 관한 자료, 소련에 반하는 모든 종류의 자료, 모든 전쟁문학, 전쟁과 관련된 모든 학술, 기술적인 자료들이다. 학술도서관에서는 이 언급된 자료들에 대한 철저한 검열이 이루어졌다⁵⁶⁾.

금서목록에는 국가사회주의 이념에 지도적 역할을 했던 인물 102명과 이와 관련된 자료를 주도적으로 출판했던 출판사가 공개됐으며, 이들 출판사에서 간행된 모든 출판물은 금지됐다. 이 작업 다음에는 1933년과 1945년 사이에 독일, 오스트리아와 독일 대신 외국에서 발간된 장서의 내용을 검열하는 작업이 뒤따랐다. 1946년에는 “선별 장서리스트”를 독일 국민교육부에서 발간했으며, 여기에는 13,233 단행본과 약 1500 종의 학술지가 대상이었다⁵⁷⁾. 그 결과 파시스트적이고 군사적, 제국주의적 내용인 도서나 또는 점령군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모든 장서는 금서 대상이었다. 그러나 전체 도서의 내용 중 부분적으로 위의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에는 금서목록에서 제외시켰다.

이 독일도서관의 선별된 금서목록에 대한 서방세계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마도 인종차별과 나치당 중심의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바탕으로 긍정적이었다. 소련군사행 정부는 선별리스트 작업에 대해 지속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더불어 도서내용의 통제와 허용에 대한 수정작업도 계속했다. 1946년 6월에는 의학분야의 선별리스트도 국민교육과에 보냈다. 이 의학분야의 자료에는 25종의 금서와 부분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내용을 담고있는 10종의 도서가 포함되었어있었다⁵⁸⁾. 독일소련군사행 정부는 금서 문제에 있어서 매우 세밀하게 작업을 진행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도서를 도서관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지침까지도 내렸다. 여기에 더욱더 심각한 상황은 소련군사행 정부가 1948년 8월부터 100여 군데 이상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간섭을 시작했다. 이 소련군사행 정부의 감시는 민족사회주의 또는 군사전쟁의 도서가 아직도 공공도서관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제거되지 않았으며, 독일도서관에서 작성한 금서목록 역시 소련이 원하는 수준에서 작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에서였다⁵⁹⁾. 그 결과 국민교육과는 1946년 9월 2 개월만에 두 번째 도서선별목록을 작성해야만 했다.

56) Dokumente. *op. cit.* p. 129ff.

57) C. Mones., "Bericht ueber die Tagung", *Der Volksbibliothekar*. Jg.1(1946), p. 67.

58) Steigers. *op. cit.* p. 243f.

59) Steigers. *ibid.* p. 245f.

1947년에 완성한 첫 번째 금서목록의 부록은 금서목록 작성에 전환기를 가져왔다. 이 금서목록은 나치 관련 자료의 제거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 마스주의와 트로츠키주의적 자료를 공격의 대상으로 강화하는데 있었다⁶⁰⁾. 러시아 혁명가인 레오 트로츠키(Leo Trotzki)를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금서목록에는 그의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소련의 스탈린주의적 지배에 비판적이고, 브르조아적인 성향을 띤 출판물은 금서목록에 추가됐다. 이러한 도서관장서의 정화는 현실정치의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 첫 번째 금서목록은 어느 정도 서방세계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나 금서목록의 부록이 발표되자 이에 대해 강한 비판을 표시했다⁶¹⁾. 소련과 동독의 권력자에게 호의적이 아닌 출판물 금지는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어 1948년에 소련군사행정부는 각 주와 지역의 국민교육과장에게 도서관장서를 다시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지시사항에는 소련에서 민중의 적으로 지목되는 트로츠키 외 33명의 작가들을 거명하여 이들의 작품을 제거하도록 했다⁶²⁾.

계속해서 독일도서관은 1948년과 1952년 사이에 발간된 출판물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금서리스트를 작성했다. 이 리스트에는 10,000종의 서명과 도서내용에 대한 결정이 유보되어 도서검열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도서 47,000종도 수록되었다⁶³⁾. 첫 번째 도서검열위원회는 1947년 10월에 열렸다. 이 위원회는 선별리스트에 등재된 서명과 또 그 리스트에는 포함되어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작품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 결과 7종이 리스트에서 제외됐고, 토론의 대상이 된 작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제출한 후에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 단행본에서 특정 부분 몇 장만이 금서의 기준에 해당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자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만약 특정 도서가 학생에게는 위험할 수도 있지만 교수에게는 중요한 연구자료일 경우 이러한 자료는 일반 이용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특수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특수서고를 설치하였다.

당시 200만 권 이상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던 독일도서관은 검열리스트를 작성하는데 6년간 수많은 직원을 동원해야 했다. 첫 2년 간에는 50명 이상의 직원이 검열에 집중 투입되었다⁶⁴⁾. 이러한 업무의 비중에 대해 당시 독일도서관 관장이었던 Uhlendahl은 “이 도서관이 설립된 이래 검열리스트 작성이 가장 어려웠다”⁶⁵⁾고 술회했다. 다른 도서관장서의 선별은 검열

60) Steigers. *ibid.* p. 246.

61) A. Greguletz, "Der Beginn der stalinistischen Weichenstellung fuer das DDR-Bibliothekswesen in Deutschland 1945-1949", *Die Entwicklung des Bibliothekswesen in Deutschland 1945-1965*. Wiesbaden, 1998, p. 244.

62) Steigers. *op. cit.* p. 252f.

63) Steigers. *ibid.* p. 249ff.

64) "Wiedereroeffnung der Deutschen Buecherei fuer die Allgemeinheit", *ZfB. Jg.* 61(1947), p. 223.

65) H. Uhlendahl, "Die Entwicklung der Deutschen Buecherei seit 1945", *ZfB. Jg.* 65(1951), p. 257.

리스트에 따라서 또는 반복되는 선별작업의 통제를 통해서 여러 단계로 이루어 졌다. 독일소련군사행정부는 만약 검열에서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행정부는 독일국민교육청(DVV)을 통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시 해당 도서를 15일 이내에 정확히 검토하고 이미 대출되어버린 검열 대상의 도서에는 직인을 찍도록 조치했다. 대규모 학술도서관이나 각 지역의 검열위원회 회원들은 15일로 지정된 재검열 기간을 대책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Greifswald 대학 도서관장인 Wilhelm Braun은 도서내용의 검열에 1권 당 2분이 소요되고 500.000 권을 검열하는데는 하루 8시간 근무 직원이 2100일을 필요로 하고 또한 Rostock대학도서관장 Bruno Claussen은 각 권당 검열에 1분이 필요로 하고 820.000권에는 13.683시간 혹은 1710근무일이 필요하다고 독일행정교육부에 시간계산표를 제출하기도 했다⁶⁶⁾.

독일소련군사행정부는 독일도서관의 검열리스트는 완결판이 아니며 이 리스트는 단지 예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리스트에 수록되지 않은 장서에 대한 검열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도서관장의 임무를 간접적으로 명시했다. 이는 결국 검열도서 선정이 세심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도서관 책임자를 비판하는 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⁶⁷⁾.

학술잡지의 검열은 단행본보다 더 복잡하다. 제본된 학술잡지에서 특별히 한군데 또는 몇 군데의 기사가 검열대상에 해당될 경우 도서관은 꽤 까다로운 상황에 처 할 수밖에 없다.

Halle대학도서관에서는 파시스트적 혹은 군국주의적 경향을 띤 서문이나 발문(Nachwort)이 끼어있을 경우에 다른 도서관에서처럼 이런 것들을 제본학술잡지에서 제거하는 방법을 택했고 불온성이 강한 내용은 그 자리를 다른 종이로 덧붙이거나 아예 검정으로 칠해버렸다⁶⁸⁾.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리하여 도서관은 이러한 도서를 구입에서 아예 차단시키거나 해당 학술잡지의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택했다.

장서의 검열 결과 Halle 대학도서관은 1946년까지 11.000권, Greifswald 대학도서관은 1947년까지 11.260권, Rostock 대학도서관은 12.160권, Jena 대학도서관은 심지어 34.151 권에 달했다⁶⁹⁾. 이 숫자는 장서 정화작업이 완결되기 이전의 통계이므로 실제 선별된 도서의 양은 후에도 계속되었으므로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소련군사행정부(SMAD) 명령 39 호에 의하면 선별된 도서는 전부 군사령부에 보내게 돼있었다. 그러나 동독의 국립도서관인 라이프치히 독일도서관과 베를린 국가도서관은 그들의 장서 검열에서 예외에 속했다. 이들 두 도서관은 국립도서관으로서 그들의 자료수집 정책

66) Dokumente.. *op cit* p. 128.

67) *Liste der aussondernden Literatur*. Berlin, 1946. p. 4.

68) *Entnazifizierung*. Hrsg. von Clemens Vollhans. Muenchen, 1991. p. 364.

69) *Entnazifizierung*.. *op cit*, p. 365.

이 대학도서관과는 달랐다. 그리하여 이 두 도서관은 SMAD의 주부 부서와 협상을 통해 납본법에서 예외규정을 두어 검열대상도서는 도서관에 별도의 보관장소를 마련하여 자물쇠를 채워 완전히 차단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동독 북부지역은 베를린 국가도서관이 남쪽지역은 라이프치히 독일도서관이 도서선별작업과 자료의 보존, 차단을 책임졌다. 그러나 이러한 검열대상자료의 처리 방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학자들은 그들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베를린과 라이프치히에 가야만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하여 독일국민교육청은 학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려했지만 SMAD는 두 곳의 지정된 특별보관소를 끝까지 관철시켰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1945년부터 이용이 금지된 도서에 대한 해지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됐으나 해금 작업 자체 워낙 복잡하여 결국은 1990년 독일이 통일될 때까지 금서의 이용이 불가능했다.

베를린 국가도서관에는 자료의 검색 결과 금서는 1956년 160,000권에 달했고, 해마다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1965년에는 180,000권에 달했다⁷⁰⁾. 60년대 후반에는 금서만을 보관했던 특별보관소의 명칭이 완곡한 표현인 “특별연구도서자료관”으로 바꾸었다.

5.2 국가경제발전 중심의 장서개발: 자연과학과 기술분야

전쟁 직후 소련점령지역과 동독은 국가의 정책을 경제발전 중심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자료의 수집과 제공에 전력을 기울여야 했지만 국가 체제 변환기에서는 이념적 갈등을 도외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과거 이념에 너무 집착하여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자료에 치중한 결과 자연과학과 기술분야의 자료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리하여 과거 일방적인 편협한 자료개발정책을 지양하고 자연과학과 기술분야 장서구성으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⁷¹⁾.

과학자와 기술자 중심의 자료수집도 직접적으로는 정치적인 목적에 기인했다. 과학, 기술분야의 자료 수집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국가 재건에 속도를 가하고 동독의 산업과 농업에서 생산력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도서관은 사회주의 완성과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되기도 했다⁷²⁾.

학술도서관은 국가 경제계획을 실현시키고 경제 주력분야의 건설에 필요한 도서수집에 주

70) *Jahresbericht der Deutschen Staatsbibliothek* 1956(bis 1965). Berlin, 1958(bis 1971). p. 42.

71) H. Kunze, *Bibliotheksverwaltungslehre*. Leipzig, 1956. p. 68.

72) "Das wissenschaftliche Bibliothekswes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m Siebenjahrplan (Perspektivplan 1959-1965)", *ZfB* Jg.73(1959), p. 277.

력했다. 이러한 특정 자료 중심의 자료수집에는 심지어 다른 분야의 예산까지도 전용되었다⁷³⁾. 그 결과 도서관의 장서구성이 여전히 국민경제발전계획에 부응하지 못하고 전통적인 인문, 사회과학 분야에 치중되어있다는 비판적 여론이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60년대에 들어와서 자연과학과 기술분야 중심의 자료수집은 도서관의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⁷⁴⁾.

5.3 도서관 장서구성과 정당과의 상관 관계

도서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장서개발에서 중앙당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도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는 데 있었다. 정치적, 사상적 내용의 도서는 당연히 인문, 사회과학 분야 소위 고전 인문주의나 진보, 급진적 문헌이며, 이러한 인문, 사회과학분야의 자료에서 동독의 노동자, 농민 또는 그 관련단체에 반하는 도서 즉 인종차별, 특정국가의 증오, 식민주의 억압, 전쟁, 관습의 위배, 파시스트, 군국주의, 반공산주의 내용의 도서는 수집에서 제외됐다⁷⁵⁾.

그러나 이러한 장서개발정책은 국립도서관인 베를린과 라이프치히에서는 예외였다. 라이프치히 독일도서관은 모든 독일 도서, 동독과 서독에 관련된 외국도서, 외국에서 출판된 독일 도서, 독일 작품의 번역서, 독일에 관한 도서, 독일 인물에 관한 도서를 완벽하게 수집해야 하는 국가서지작성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그러므로 동서독 분단 후에도 서독에서 출판된 도서는 서독의 출판사가 납본법에 따라 동독 국립도서관에 납본했다. 동베를린의 국가도서관도 라이프치히와 거의 동일한 자료 수집 기준을 유지하였다. 베를린 국가도서관은 동독에서 외국서적의 수집센터 역할을 했다. 이 도서관은 모든 분야의 외국 학술도서를 가능한 한 완벽하게 수집하고 특히 외국 학술잡지의 수집에 큰 비중을 두었다. 이 두 도서관의 광범위한 자료수집의 범위에는 다른 도서관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수집이 배제된 도서를 공식적으로 수집 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됐었다.

1946년 전쟁 직후에는 정치적 기본원칙에 입각한 장서개발에서 새 국가체제에 위배된 장서의 정화작업은 계속되면서 동시에 SMAD의 명령에 따라 Marx(1종), Engels(2종), Kalini(2종), Stalin(7종)과 그 외 다른 작품들은 각각 10권의 복본으로 서가를 채워야했으며, 이러한 특정 작품은 해당 도서관의 정규 예산에서 지불됐다⁷⁶⁾. 심지어 1949년 주정부의 국민교육부

73) 5.3항 참조.

74) Jahrbuch. *op cit.*, 1962/63. p. 335f.

75) Kunze. *op cit.*, p. 18.

76) H. Kunze, "Die Zusammenarbeit der wissenschaftliche Bibliotheken in Deutschland", *ZfB*. Jg. 68(1954), p. 14f.

는 독일국민교육청의 권고로 막스주의 작품의 구입을 위해 “보관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각 도서관은 이 기금을 막스주의와 관련된 출판물을 전담했던 Dietz 출판사에게 지불했다. 이 출판사는 그들 간행물이 발간되는 즉시 각 도서관에 배포함으로서 도서관에서는 적어도 막스주의와 관련된 자료의 선정과 구입에는 하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었다⁷⁷⁾. 이러한 자료구입 방법의 목적은 모든 도서관이나 연구소등에서 막스주의에 관한 작품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자동으로 제공하는데 있었고 동시에 도서관은 도서구입비의 할인율도 적용받을 수 있어 예산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특별한 자료 구입 방법을 제외하면 도서관장서의 선택은 사서의 권한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외국출판물들- 동구권, 소련, 서독과 자본주의 서방세계-의 구입에서 발생했다. 동구권에서 발간되는 출판물은 자동적으로 진보적으로 간주됨으로 이들 자료의 선정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서방세계의 자료에 관해서는 자료의 선정 이전에 이들 자료가 반동적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에 적대적이라는 의구심을 갖게됨으로서 어려움에 봉착했다.

5.3.1 사회주의국가의 자료구입

동독의 학술도서관에서 동구권국가의 문헌수집은 이데올로기적 동기와 국가 간의 친선 이외에도 동독은 소련을 그들의 상징적 국가모델로 삼았기 때문에 어떤 자료보다도 당연히 우선순위에 있었다. 소련과 동구권 국가의 문헌은 국가 간의 문화협정을 통해 확실한 기반이 마련됐었다⁷⁸⁾. 이 문화협정에는 자국에서 출판된 모든 출판물은 상호 제공하기로 됐다. 문화협정에 따라 자료 수집의 범위는 전 학문분야에 걸쳐 있었다. 1952년 베를린 국가도서관의 “문화교환센터”는 가능한 한 모든 동구권의 출판물 2종을 접수해서 1부는 자관에서 보관용으로 관리하고, 다른 1부는 동독도서관의 특성화 원칙에 따라 해당 도서관에 분배했다.

동구권 문헌수집은 도서관간 자료의 직접 교환을 통해 이루어졌다. 동독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교환 파트너 도서관은 모스크바 레닌도서관이었다. 1955년 베를린 국가도서관과 레닌도서관은 양국의 모든 출판물- 통속소설, 학술전문서적, 학술지와 신문-의 상호교환을 위한 협정에 서명했다⁷⁹⁾. 이 교환협정은 동독도서관이 소련과의 자료교환에 미온적이라는 레닌도서관 관장의 비난에 따라 동독의 사서가 직접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체결했다. 이러한 협정은 주로 소련의 제안으로 이루어져 동독은 수동적으로 임했다. 이러한 동구권 국가들의 수동적 태도로 인해 1959년에는 소련과 인민주의 국가들과의 자료교환을 강화해야된다는 지침이 소

77) P. Genzel, "Die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der wissenschaftlichen Bibliotheken auf dem Gebiet der Literaturaustausches", *Deutsche Staatsbibliothek 1661-1961*. Berlin, 1965. p. 193.

78) Genzel. *op. cit.* p. 305.

79) *Zehnjahresbericht der Deutschen Staatsbibliothek 1946-1955*. Berlin. p. 61.

련으로부터 내려오기도 했다⁸⁰⁾.

동독학술도서관들은 소련과 동구권 문헌에 큰 비중을 둔 장서구성에 어떠한 직접적인 비판은 불가능했지만 동구권 자료의 이용 통계를 제시하는 우회적 방법으로 도서관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⁸¹⁾. 예를 들면 Griefswald 대학도서관에서는 1962년 동구권 자료의 구입은 그 해 전체 자료구입의 30%이상을 차지했으나 그 자료의 대출은 0.7%에 불과했다. 또 1962/63년 Jena대학도서관에서는 학위논문의 인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68종의 학위논문 인용문 18,253곳 중에서 351곳인 약 2%만이 소련 자료를 인용했고, 게다가 그 중에서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논문에서 한변밖에 인용되지 않았다. 이 대학은 또 소련의 학술잡지의 구입과 이용에 대한 통계도 제시했다. 1960년 전체 학술잡지 구독의 0.5%에 불과했던 소련의 학술잡지는 1962/3년에는 10%로 점유율이 높았으나 이에 비해 그 이용률은 극히 저조했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이데올로기적 장서개발은 현실을 외면한 실패한 정책이란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동구권 중심의 자료수집원칙은 원하는 속도로 변할 수 없었다.

5.3.2 서독과 자본주의국가의 자료구입

서방세계의 자료를 구입하는 방법은 동구권과의 그것과 전혀 달랐다. 동독학술도서관의 명성은 서방세계의 학술자료를 얼마나 많이 수집하여 이용자에게 쉽게 접근하도록 하는가에 달렸다고 Dresden 주립도서관장은 술회했다⁸²⁾. 도서관마다 이데올로기의 경계를 넘어 장서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되었으나 악화된 재정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전쟁 직후 1948년 동독이 국가로서 체제를 갖추기 전까지는 환전문제로 인해 서방세계의 자료구입에 어려움이 많았다. 1949년부터는 서구의 문헌을 구입하는데 제도적으로 환경이 개선되었다. 중앙정부는 서독과 서방국가 문헌의 수요를 감안하여 원하는 자료의 목록을 각 도서관에서 요청하도록 했다⁸³⁾. 외국도서와 서방세계의 문헌수집은 1950년 베를린 국가도서관에 설립된 중앙학술자료센터(ZwL:Zentralstelle fuer wissenschaftliche Literatur)를 통해서 중앙집중식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 센터에서는 각 도서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이 들어오면 주문목록을 심사한 후 해당 출판사에 주문한다. 동독의 국가경제 5개년 계획이나 정부의 특별

80) "Das wissenschaftliche Bibliothekswese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im Siebenjahrplan (Perspektivplan 1959-1965)", *ZfB*, Jg.73(1959), Beilage zu Heft 5, p. 11.

81) K. Franken, *Literaturversorgung in der Geisteswissenschaften der ehemaligen DDR*, Kurzer Ueberblick ueber Funktion, Bestand und Geschichte der Bibliotheken, der Saechische Landesbibliothek und der Bibliotheken der Akademie der Wissechschften, Konstanz, 1991, p. 48f.

82) B. Burgemeister, "Die Saechische Landesbibliothek von 1945 bis 1990", *Bibliotheksforum Bayern*, Jg. 20(1992), p. 61.

83) Burgemeister, *ibid.* p. 62.

한 결정에 따라 이 센터에서의 문헌 구입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자료보다도 자연과학 분야에 더 비중을 뒀다. 1951년 신설된 학술자료선정위원회는 학술도서관과 주립도서관의 서방세계의 자료구입에 대해 배려를 하는 편이었으나 총무처고등교육과나 중앙학술자료센터에서는 한정된 재원 때문에 수동적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베를린 국가도서관만은 외국자료수집 센터로서 필요한 외환을 확보할 수 있었다⁸⁴⁾ 이러한 외국자료의 구입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하여 학술자료선정위원회에서는 산업분야의 특정기업이나 특수연구소에 필요한 외국문헌의 수요를 인정하고 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학술도서관에 외국 전문학술도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⁸⁵⁾.

중앙학술자료센터는 설립 2년 후 외환의 부족으로 학술도서관에서 요구한 최소한의 자료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업무평가를 인정해야만 했다⁸⁶⁾. 특히 서방세계의 사회과학 분야의 학술잡지는 베를린 국가도서관 한 군데서 만이 구독이 가능할 정도였다. 1952년 이 도서관의 예산은 예정보다 65%가 삭감되었다. 물론 나중에 보충이 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환경에서는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수서 정책을 펼치는데 당연히 어려움이 따랐다. 그리하여 이러한 제한된 재정이라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1956년 동독에서도 서독의 국가협동수서계획(SSG-Program)에 따라 동독국가협동수서계획의 수립을 시작했다⁸⁷⁾.

중앙학술자료센터는 그들이 구입한 자료의 이용이 동독의 경제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 이외에 정치적인 평가도 내려야 했다. 다시 말하면 이 센터의 책임자는 주문자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사상적 내용을 고려하고 또 각 도서관에서 요청한 자료의 구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이 센터는 서독의 신문구독시 신문에 끼어 배달된 자본주의 시장의 광고전단지들은 빼내고 또 동독의 평화유지에 반하는 내용의 학술잡지 권호도 주문에서 제외시키기도 했다.

중앙학술자료센터는 서방세계의 자료는 물론 심지어는 동구권의 자료조차도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강한 비판을 받아 그들 업무의 권한을 일부 빼앗겼다. 그리하여 1954년부터는 각 학술도서관에서는 그들이 주문, 요청한 자료에 대한 심의를 직접 총무처고등교육과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이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관장할 인원 부족으로 인해 과거와 같이 세밀한 자료의 심사는 불가능했으나 여전히 자료의 정치적 검증은 수행했다.

그러나 학술도서관에서는 국가가 인정하는 몇몇 학자들이 불온도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자료 선정에 있어서 자율권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4) "Bibliothekarische Fachkommissionen beim Staatssekretariat fuer Hochschulwesen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ZfB. Jg.* 66(1952), p. 188.

85) Bibliothekarische Fachkommissionen.. *op. cit.*, p. 189.

86) O. Tyszk, "Bericht ueber die Tagung der Zentralstelle fuer wissenschaftliche Literatur vom 14. Nov. 1952", *ZfB. Jg.* 67(1952), p. 461.

87) Kunze. *op. cit.*, p. 72ff.

사서들은 국가반역에 휘말려 들지 않으려고 사서의 자기검열의 현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국가와 당의 지도자들은 학술도서와 서방세계의 자료가 적시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식인들의 호소에 직면했다. 50년대 중반에는 어느 정도 경제 상황이 개선되어 원칙적으로는 당의 입장에서 모든 과학자, 기술자, 연구자들에게 그들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서방세계의 자료 중에서도 특히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50년대 말부터는 극심한 재정난으로 도서관도 국가의 건축 정책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도서관은 장기적인 장서개발의 원칙까지 흔들리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Greifswald 대학도서관은 동독국가협동수서계획에서 지정받은 전문분야의 자료조차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 접했었다⁸⁸⁾. 그리하여 만일 대학연구소도서관에 특정 학술잡지가 구독중이면 대학 중앙도서관에서는 동일 학술잡지의 구독을 중단시켰다. Jena 대학도서관은 1960년에 그때까지 구독하던 학술단행본과 교과서로만 만족하고 잡지와 각종 총서의 구독을 지속할 수 없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또 베를린대학도서관은 1959년부터 그때까지 구독 중이던 학술잡지의 구독을 지속시키기 위해 핸드북과 단행본의 구입을 포기했다. 그 외의 대학도서관들도 사정은 비슷하여 자료의 요구는 상호대차를 통해 이루어졌다. 상호대차의 급격한 상승은 결국 각 도서관의 빈약한 장서상태를 표출한 것이다⁸⁹⁾. 60년대부터 지속적이고 균형이 잡힌 장서개발은 거의 불가능했고 게다가 이미 낮게 책정된 예산마저도 갑작스런 건축정책으로 인해 도서관의 후퇴를 재촉하였다.

대학도서관의 극심한 재정난을 계기로 총무처고등교육과는 그때까지 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에 비판을 가하면서 도서관 정책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1959년 장서개발정책위원회가 재조직되어 첫 예로 Jena 대학도서관의 자료수집정책을 점검하였다⁹⁰⁾. 이 위원회는 이 도서관의 주문자료를 별도로 조사한 결과 자료의 심각한 불균형 상태를 밝혀냈다. 위원회는 자료구입 예산의 배분을 동독자료: 동구권자료: 서방세계자료의 비율을 2(51.000원): 2(50.000원): 3(75.000원)로 정했으나 조사 결과는 제시된 규정과는 너무 동떨어진 31.741DM(1869원): 8.553DM(595원): 194.292DM(6795원)로 나타났다. 여기에다 또 이 도서관은 국가협동수서계획에 맞추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막스즈의-레닌주의 고전과 노동자운동의 역사, 기술분야의 자료에 너무 소홀히해 위원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자료점검 결과를 토대로 장서개발정책세미나에서 Brueckman은 총무처고등교육과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회주의 정당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학술도서관의 장서개발에 더 이상의 자율권을 부여할 수 없으며 도서관의 수서 정책은 과거 전통을 탈피하고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통해 책임의식을 가진 사서만이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⁹¹⁾. 그는 계속해서

88) Braun. *op. cit.*, p. 195.

89) Braun. *ibid.* p. 196f.

90) Marwinski. *op. cit.*, p. 79f.

사회주의 당파성의 기본 원칙을 심하게 훼손하는 자유주의 사고의 장서개발을 비난했다. 그는 도서관의 장서구성에서 책임 있는 직원의 의식을 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동구권의 자료를 적어도 서방세계의 자료만큼 구입해야하며, 서방세계의 자료는 꼭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구입하는 것을 의미했다.

악화된 재정난에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는 대학도서관의 과거 전통적 장서구성에 변화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도서관은 기본적인 자료 이외에는 대학도서관의 특성 화계획에 따라 국가공동수서계획에 보조를 맞추어야 했다. 그리하여 대학도서관들은 800내지 1000종의 기본학술잡지만을 구독하고 그 외 서방세계의 학술잡지는 각 대학도서관의 전문 분야별 특성화계획에 따라 해당 도서관에서만 구입을 하기로 했다⁹²⁾. 장서개발정책세미나의 종합 보고서에서 학술도서관의 대표들은 Brueckmann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지만 외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들이 과거의 장서구성에 따른 자료수집을 고집한다는 도서관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총무처고등교육과에서는 할당된 예산으로 효과적인 자료의 구입을 위해서 분야별 자료할당 조정을 위한 센터를 신설하였다. 이 센터에서는 모든 대학에 의무적으로 할당된 주문을 종합하여 중복구입을 조사하였다. 중복구입이나 복본 구입은 중요하고 기본적인 학술잡지나 단행본에만 한정하였다. 그 결과 Jena 대학도서관에서는 1961년 학술잡지 복본 358종의 구독을 취소하였고 70종은 구독을 완전히 중지시켰다⁹³⁾. 이는 전체 학술잡지 구입의 23% 감소를 의미했다. 베를린에서는 이러한 자료구입조정을 베를린 소재 대부분의 도서관 -국가도서관, 대학도서관, 학술아카데미도서관-에까지 확대시켰고, 더 나아가서는 이 도서관들의 협력파트너 도서관에까지도 넓혀갔다⁹⁴⁾.

물론 이러한 도서관 장서개발의 조정방침은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하기도 했지만 이 모든 노력도 결국 빈곤한 외환의 부족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비정치적이고 국가경쟁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들이는 자연과학과 기술분야의 자료수집은 재정난의 영향을 덜 받았다. 결과적으로 총무처고등교육과가 도서관 장서개발에 관여한 결과는 도서관 통계에 그대로 반영됐다⁹⁵⁾. 국립도서관인 국가도서관과 독일도서관은 국립도서관으로서의 특정 권한 때문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대학도서관의 사정은 달랐다. 1954년 Greifswald 대학도서관은 동구권의 자료가 6%에 불과했고 Halle 대학도서관은 20%에서 25%가 소련과 동구권 자료로 채워졌으며, 그 외의 대학도서관은 15%였다. 그러나 1962년에

91) O. Tyzko, "Arbeitstagung ueber Probleme der buch- und Zeitschriftenerwerbung. Grundsatzfragen der Erwerbungsfragen der Sondersammelgebiete und Kontigente", *ZfB Jg.* 74(1960), p. 50.

92) Tyszko. *op. cit.*, p. 258.

93) E. Juenstjens, "Die Koordinationsstelle fuer Literaturbeschaffung...", *Langer Jahre Redlich Streben*. Jena. 1970. p. 85.

94) Krueger. *op. cit.*, p. 38.

95) Franken. *op. cit.*, p. 47ff.

는 6개의 대학도서관 중 4곳이 전체 장서의 20% 이상을 동구권 자료를 구입하는 등 동구권 자료의 비중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여 1962년에는 25내지 35%까지 달했고 반면 70년대와 80년대까지 서방세계의 인문사회과학분야 자료는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통계가 나오기까지 사서들의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사서들은 이용자 중심의 장서구성을 논리로 변호를 했으나 정치적 정당성의 원칙과 당에서 내세운 장서개발에 관한 왜곡된 객관주의의 비판 앞에서 또는 빈약한 재원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당의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6. 이데올로기 선전도구로서의 학술도서관

6.1 학술도서관의 개방

동독은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재앙이었던 나치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민주주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과거의 정치 의식을 변화시키는 집중된 힘이 필요했다. 이러한 정치, 사회적 현상에서 학술도서관은 그들의 장서를 민중 모두에게 개방하여 국가에서 의도하는 교육적 과제를 떠맡았다. 새로운 국가에서 학술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은 국가재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각 분야의 직업교육 종사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일이었다. 학술도서관은 이를 위해 모든 사회계층의 이용자에게 자료를 개방하여 사회주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해야 했다. 1947년 독일도서관의 조사에서 “정신적인 보물(도서관)은 학문을 하는 연구직과 창조적인 직업에서만 아니라 일반 노동직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⁹⁶⁾. 이렇게 학술도서관을 민중에게 개방해야만 하는데는 이데올로기적 의도가 담겨있었다. 과거에는 문화적 유산이 지배계급에 의해 독점되어 대중에게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술도서관은 이러한 “사회주의적 문화혁명”⁹⁷⁾을 통해 지식과 문화의 벽을 허물어야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문화혁명은 누구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특히 지금까지 소외되어왔던 노동계급에게도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문화유산을 개방하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사회주의국가를 완성시키는데 있다. 필요한 지식은 인간의 창조적 힘을 깨우쳐 민중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며, 그 결과 노동자의 학문적, 기술적 발전은 사회 발전을 가속화 시켜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게 한다. 이러한 교육정책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학술도서관은 전시회, 강

96) Wiedereroeffnung.. *op. cit.*, p. 227.

97) A. Kosing, *Woerterbuch der Marxistisch-leninistischen Philosophie*. Berlin, 1985. p. 307.

연회,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를 조직, 운영했다. 직업전선에 있는 일반 이용자가 도서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Rostock 도서관에서는 목록시스템을 간소화하여 분류목록에다 주제명 목록도 제공하고, 또한 열람시간을 연장하거나 주말에도 도서관을 개관했다⁹⁸⁾.

그러나 학술도서관에서는 사회주의 문화혁명의 교육적 기능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도서관 장서구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용자의 통계에서도 산업, 상업, 공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의 도서관 이용률이 예상보다 매우 낮아서 현실과의 괴리를 보였다⁹⁹⁾.

6.2 정당 홍보도구로서의 진보적 도서관

국민을 이념적으로 재교육시키고 국민의 새로운 진보적 정치의식을 형성하게 하기 위한 학술도서관의 과제는 이용자에게 새로운 인간의 창조에 필요한 진보적인 자료를 쉽게 접근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서관은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권장도서를 다른 자료들 보다 더 강조하여 열람실에 배치하고, 특정 서지를 권장하고, 열람용 선별목록을 작성하였다.

6.2.1 열람실

열람실 구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정치국 즉 당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자료를 배치하는 것이다. “열람실은 도서관이 소장한 장서의 세계를 이용자에게 직접 대면하게 하는 곳이다. 열람실의 참고도서는 그 도서관의 얼굴이다. 이 열람실 참고도서의 장서 선택과 구성은 도서관의 존재와 특성을 직접 표현한다”¹⁰⁰⁾. 열람실 자료의 선정에서는 정치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의 원칙에 반하는 자료는 근본적으로 배제시켰다. “열람실은 이용자에게 해를 끼치는 이념의 피난처나 반사회주의 이념의 식물원이 아니다”¹⁰¹⁾라고 했다. 그리하여 열람실에서 전쟁 전의 자료와 서방세계의 자료는 점차 자취를 감춘 대신 동독이나 소련 등 인민주의국가의 자료, 특히 마스-레닌주의의 자료는 계단에 쌓아놓을 정도였다. 그러나 열람실을 모두 이념도서만으로 채울 수는 없었다. 각 분야 비슷한 자료가 동구권과 서방세계에서 발간된 경우 동독의 자료를 우선하는 것은 말 할 필요도 없지만 동구권 출판의 양과

98) W. Suessmann. "Die Universitaet Rostock seit 1945", *ZfB Jg.* 69(1951), p. 426.

99) Kunze H. Die Zusammenarbeit.. *op. cit.*, p. 10.

100) H. Roetsch, "Bemerkungen zum Aufbau von Lesesaal-Handbibliotheken", *Jg.* 74(1960), p. 96.

101) Roetsch.. *ibid.* p. 98.

질은 서방 자본주의 출판업계를 뒤따르지 못했다. 그리하여 열람실의 참고도서나 핸드북, 백과사전, 각 종 서지들이 정치적 폭발성을 지니지 않는 한 대부분 서방세계의 참고도서도 열람실에 배치하였다.

학술도서관의 열람실에서 마스-레닌주의 자료를 서가에 배열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그리하여 그토록 유명한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이념도서를 하나의 그룹으로 종합해서 열람실의 가장 눈에 띄는 중앙에 배치했다. 그러나 마스-레닌주의 이념도서를 중심으로 자료를 배가한 결과 그 외의 이념도서들은 이용이 매우 저조했다. 그 결과 마스-레닌주의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대표적인 고전자료들은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열람실의 중심에 배가하고 마스-레닌주의의 특정 주제와 관련된 자료는 해당 주제분야에 분류하는 방법을 택했다. 마스의 ‘자본론’은 경제학에, 엥겔스(Engels)의 ‘독일 농민전쟁은 역사에 Bebel 의 ‘종교가 국민에게 꼭 필요한가’는 종교학에 배열하였다¹⁰²⁾.

6.2.2 권장서지

인민의 이념교육에서 혁명과 개혁에 필요한 진보적 자료를 홍보하는 수단은 이와 관련된 서지의 발간이었다. 서지의 출판은 열람실의 자료배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효과가 크다. 베를린 국가도서관에서는 소련 자료만을 선별한 책자형 목록을 작성했다. 당연히 도서관의 권장 서지로는 마스-레닌주의 서지였다. 1953년 공산당중앙위원회의 정치국은 경제와 정치적 문제에 관한 선별자료리스트의 발간에 자극을 주었다. 정치국은 동독국민의 평화와 통일,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투쟁을 위해서는 이러한 진보적 자료의 역할을 강요하면서 이용자의 지도와 도서선정의 중요한 무기인 서지의 발간이 주목을 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¹⁰³⁾. 이러한 선별서지는 독일 국가서지기관인 라이프치히 독일도서관이 출판관할부서, 교육부, 아카데미와의 주도로 간행했다. 정치국은 이 서지를 산업계, 공업계, 문화계 등 각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사회주의를 완성시키는데 필요한 자료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서지의 발간은 동독 국가서지와는 별도로 특별서지 형태로 1954년과 1965년 사이에 41종이 발간되었다¹⁰⁴⁾. 첫 번째 서지는 1945년과 1954년 사이에 발간된 농업경제학 학위논문서지였다. 4, 5, 14, 24권은 농업, 6권은 갈탄 저온건류와 갈탄코크스화, 12권은 용접기술, 18권은 에너지기술 등이었고 문학에서는 톨스토이 서지가 있었다. 정치적인 분야에서는 7권의 노동조합임원을 위한 서지, 11권은 국민대표(국회위원)를 위한 서지 등이 있었고 이외에도 ‘주택

102) Stoessel. *op cit.*, p. 338.

103) *Dokumente zur Kunst-, Literatur-und Kulturpolitik der SED*. Hrsg. von E. Schubbe. Stuttgart. 1972. p. 284.

104) Schaaf. *op cit.*, p. 77.

건설' '근로자보호' '새로운 중국' '기술교육과 훈련 등등의 서지가 발간되었다¹⁰⁵⁾. 이 모든 종류의 서지들은 결국 동독의 정치적 목적인 사회주의의 완성과 이에 필요한 경제건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러한 권장서지는 정확한 전문가의 해제와 같이 출간할 예정이었으나 처음엔 인력난으로 차질을 빚어 후에는 부분적으로나마 해제를 추가했다. 이 특별서지는 1961년부터 독일도서관의 뉴스레터 형태로 발간되었다. 1965년부터 독일도서관연맹의 정보, 도큐멘테이션, 서지위원회가 이 서지 작업을 계승했으나 출판과 배포의 지연으로 인한 최신성의 결여, 이에 따른 이용의 저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6.2.3 열람용 목록

도서관의 이용자에게 새로운 체제의 국가건설의 완성에 필요한 진보적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도구는 당연히 도서관의 열람용 목록이다. 열람용 목록은 물론 도서관의 전체 소장사항을 수록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 사상적 검열의 도구로서 선별된 자료만을 수록하는 선별목록이기도 하다. 첫 번째 열람용 목록은 1947년 베를린 국가도서관이 전쟁의 후유증에서 헤어나자 이용자들에게 최신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첫 번째 목록에는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개입되지 않았었다¹⁰⁶⁾. 그러나 그 후부터는 열람용 선별목록의 기능에 정치적 사상 즉 당의 입장이 새로 정의되면서 1945년 후에 출판된 자료들만 수록했다. 도서관은 열람용목록에서 사회주의 세계관을 중상, 비방하거나 막스-레닌주의의 관점에 반대되는 문헌을 제외시킴으로써 목록은 사회주의 교육을 위한 훈련의 도구로서 정의되었다¹⁰⁷⁾. 사회주의적 인간 의식구조의 형성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인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자료는 주로 동독에서 간행된 자료 중심이었다. 서독과 서방세계의 자료는 반사회주의적 요소가 가미되지 않고 또 동독에서 이에 상응하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만 열람용 목록에 수록했다. 이 열람용 목록은 도서관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했다. 학자나 경험이 많은 이용자는 열람용 선별목록에서 찾지 못하는 자료를 도서관 중앙목록에서 원하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었다. 이는 불온도서를 내부용 사무용 목록으로 따로 관리하는 동구권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서는 자료의 이용이 훨씬 자유로웠다는 긍정적 의견이 있기도 했다¹⁰⁸⁾.

105) *Deutsche Buecherei 1949-1959*. Leipzig, 1959. p. 25f.

106) H. Roloff, "Die Katalogsituation", *Aus der Arbeit der Deutschen Staatsbibliothek*. Leipzig, 1961. p. 64ff.

107) G. Hess, "Probleme des Auswahl-Sachkatalog(ASK) in wissenschaftlichen Bibliotheken", *ZfB. Jg.* 74(1960), p. 168.

108) J. Drtina, "Einige kennzeichnende Wesenszuege des sozialistischen Bibliothekswesens", *ZfB. Jg.* 73(1959), p. 306ff.

6.3 불온도서의 관리

2차 대전 직후 나치시대와 군국주의에 관련된 자료는 동독의 체제에 저항하는 불온자료로서 정화의 대상이었다. 학술도서관에서 제거된 이러한 자료는 폐기처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베를린과 라이프치히의 국립도서관에서 따로 관리했다. 이러한 불온도서는 이 두 도서관이 따로 마련한 “특별연구도서자료관”에서 총무처의 허락 하에서만 이용이 가능했다. 1956년 전국 도서관장회의에서 이 불온도서의 관리를 회의의 주제로 다루었다. 그 결과 불온도서의 이용은 초창기에 총무처가 중앙 감시기구의 역할을 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도서의 이용 조건이 완화되었고, 그 결과 이용자의 수도 증가했다. 도서관에서 불온도서의 이용에 관한 제한 규정은 새로운 국가체제의 기본방침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서의 이용은 대학 관계기관이나 사회단체 대표자의 허락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가능했고, 이 경우에도 열람실의 이용만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동독의 도서관에는 정치적, 사상적 이유에서의 급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책임의식이 강하고 개인의 특수한 목적과 필수 불가결한 자료의 요구에 대해서는 어느 자료든 대출이 가능하다”¹⁰⁹⁾고 되어있다. 이러한 공식적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자료의 이용에 대한 제한은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를 꺼려했지만 이용자에게 자료의 접근을 간접하여 자유시민으로서 자유로운 사고력과 창조성을 방해하는 것은 지식의 활용을 제한하여 결국은 국가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여론의 비난이 있었다. 특히 베를린 장벽 후 서방세계의 비난은 더욱 거세져서 도서관마다 점차적으로 자료의 이용 제한을 완화했다.

문학작품에 있어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구입한 자료는 거의 모두 이용이 제한되었다. 이러한 자료에 관해서는 대학도서관마다 도서관경영위원회에서 나름대로의 규정을 만들었다. 1959년 Jena 대학도서관의 규정¹¹⁰⁾에는 서방세계에서 들어온 철학, 신학, 정치, 경제학, 문학, 법학, 사회학, 마르크주의, 노동운동 분야의 자료는 학문적인 목적에 한해서만 이용이 허용됐다.

외국 학술잡지의 이용에서는 완벽한 내용의 검열은 불가능했지만 각 각의 권호가 대출될 때마다 대출 학술잡지의 내용을 조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도서관에서 소장하고있는 서독의 대중문학에 대해서 50년대에는 특별히 이용에 제한을 가하지는 않았다. 반면 1959년 Greifswald 대학도서관에서는 서독 대중소설의 이용에는 그 대학 언어학 연구소장의 동의가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했고, Jena 대학도서관에서도 이때부터는 학술적 연구목적에 한해서 이용이 허용됐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의 이용이 도서관 직원들의 자기검열로 인해 제한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50년대 당시 불온도서에 대한 도서관의 검열 분위기를 말해준다.

109) Kunze. Bibliotheksverwaltungslehre. *op. cit.*, p. 19.

110) Marwinski. *op. cit.*, p. 67.

동독 도서관의 불온도서의 이용 환경에 대한 이러한 상황을 서독의 일간지 'Welt'가 서방 세계에 알렸다¹¹¹⁾. 도서관에서 학생들은 도서관 직원이 아닌 동독국가비밀요원과 서방세계의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상황에까지 왔었는데 그 이유는 금서였던 Robert Junke와 Karl Jaspers의 저서가 대출 될 정도로 도서관 직원이 자료에 대한 검열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였다. 그리하여 모든 학생들은 그들이 대출한 자료의 서명이 기재된 대출검사표를 자료를 대출 할 때마다 제시해야했다. 이 표를 통해서 학부의 책임자는 학생들의 독서습관과 독서경향을 통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한 도서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불온도서 이용에는 물리적 제한을 가할 수는 있지만 이 자료들이 도서관의 업무과정에 있을 때는 이를 통제할 방법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자료를 구입하여 특별서고에 보관할 때까지는 이 자료를 사서로부터 격리시킬 수는 없었다. 1960년 불온도서였던 Wolfgang Leonhard의 작품 "Die Revolution erlasst ihre Kinder"¹¹²⁾ 이 정리과정에서 분실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도서관에서는 특별서고에 보관되어야 할 불온도서의 정리 과정을 일반도서보다 더 까다롭게 만들었다. 즉 불온도서는 입수 후 검수 즉시 해당 부서에서 수령필 사인 기입표를 2장씩 작성하였다. 각 부서에서 사상적으로나 전문적으로 신임할 수 있는 책임자급 사서는 도서가 해당 부서에서 업무가 끝나고 다른 부서로 이동할 때마다 자료의 입수와 이동사항을 표시했다. 이러한 업무처리에서는 책임자 이외에는 자료의 내용에 접근하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또 자료의 분실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었다. 이 기입표를 통해 책임사서는 자료의 이동 과정을 빈틈없이 추적 할 수 있다.

불온도서 중에서도 학위논문의 관리¹¹³⁾는 더욱 더 엄격하여 최고급 비밀 논문들은 동독의 비밀정보정치에만 사용되었다. 동독의 학위논문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대학이외의 다른 기관 예를 들면 경찰, 군대, 국가안전기획부, 독일사회주의통일당 중앙위원회 산하의 막스 레닌주의 연구소등에서도 간행됐다. 이러한 기관의 논문은 동독의 국가서지는 물론이려니와 학위논문 연감에서도 누락되고 국가서지 기관인 독일도서관의 특별목록에도 수록되지 않는다. 심한 경우에는 논문 제출기관의 도서관 특별서고에서조차도 보관되지 않고 비밀자료로 특별부서의 강판 금고에 별도로 안치될 정도였다. 이러한 자료는 독일 분단 41년 동안 총 논문의 16.6%인 6824종에 달했다. 이들은 비밀 보안 유지의 정도에 따라 사내용, 공무용, 제한된 이용자 중에서 전문기관의 대표나 특정 교수용, 선택된 지도자들 중에서도 국가의 핵심멤버용 4단계로 분류되고, 논문의 분류 단계에 따라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랐다.

111) *Welt* von 14. Mai 1960.

112) 이 작품 그가 독일사회통일당과 소련공산당의 간부로서 동독에서 공산당과의 단절을 묘사한 자서전적인 소설이다.

113) W. Bleek und L. Mertens, "Geheim gehaltene Dissertationen in der DDR", *ZfBB Jg. 39*, H. 5(1992), p. 315-326.

이렇게 마르크스, 레닌의 이념적 체제에 충실한 자료만을 이용자에게 접근을 허용하고, 불온도서는 검열을 하여 접근을 제한하는 학술도서관의 시스템은 결국 도서관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7. 결론

2차 대전 후 혁명적인 차원에서 학술도서관의 개혁을 밀어붙이던 당의 지도자들은 과거 도서관 직원들의 도서관에 대한 관점과 태도에 불만이였다. 새로운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학술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개혁가들의 눈에 도서관은 후퇴하고있는 것처럼 보였다. 전쟁 직후부터 60년대 중반까지 국가와 당은 학술도서관 사서의 정치적 방향과 그들의 직업관에 영향을 미쳤다. 전쟁 전의 도서관 책임자가 전쟁 후 20년 동안 계속 도서관 관장으로 재직 한 사례가 거의 없었고, 이 자리는 체제 전향적인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교육받은 전문인력인 새로운 엘리트들로 보충했다. 당의 책임자들은 다양한 정치성이 가미된 교육 훈련시스템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60년대 중반까지도 도서관 직원들은 SED당의 이념적 기초에 간격을 두고 거부반응을 보였다. 사회주의적 의식구조로 무장한 도서관 직원들의 수준은 당에서 만족할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 학술도서관의 사서들은 그들의 업무에서 과거 객관주의 형식주의, 개인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며, 소위 정치적인 직원 역시 과거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르주아적 이데올로기와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대립(충돌)에서 혼란을 겪었지만 대부분의 사서들은 전통적인 직업 신념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서독과 자본주의 국가 출판물의 규제, 소련과 동구권 자료 중심의 장서개발 정책과 빈곤한 예산 할당제, 열람실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고전인 이념서적 중심의 배치, 불온도서의 관리, 40 여 년 동안 비밀이 부쳐왔던 학위논문의 관리 등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학술도서관이 정치적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됐음을 보여주었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